월간

나라재정

FISCAL INFORMATION BULLETIN

01 | 2023 January | Vol. 73

나라재정 보기

FIS 인사이트
2023년 예산과 주요 내용

재정칼럼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디지털 전환
여야 예산전쟁,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재정당국은 2023년에 무엇을 해야 할까?

한국 재정사의 현장
공공부문 재정건전화 노력과 유특회계의 탄생
유일호 전 부총리 인터뷰 ①



FIS 한국재정정보원

CONTENTS

2023 JANUARY
Vol. 73

재정 INSIGHT

04
FIS 인사이트
2023년 예산과 주요 내용
박정화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

14
재정칼럼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디지털 전환
김영미 한국정책학회장, 상명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여야 예산전쟁,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옥동석 한국재정정책학회장,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

재정당국은 2023년에 무엇을 해야 할까?
전영준 한국재정학회장,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월간
나라재정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전화
02-6908-8200
팩스
02-6312-8959
홈페이지
www.fis.kr
발행인
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장
문의
재정정보분석본부 | 02-6908-8157
제작
㈜케이에스센세이션 | 02-761-0031

재정 **NOW**





28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36
키워드 재정
공급망

40
해외재정동향
OECD 예산 저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공공재정」

48
재정현안 속 FIS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한 국가결산

재정 **STORY**

54
이달의 재정 이야기
재정의 힘으로 육군을 강하게 하는
육군본부 예산차장실

58
재정 방방곡곡
경부고속도로의 대변신,
미리 떠나는 친환경 산책길

62
한국 재정사의 현장
공공부문 재정건전화 노력과 유특회계의 탄생
유일호 전 부총리 인터뷰 ①

66
재정 캘린더

68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71
애독자 코너



Insight



2023년 예산이 지난 12월 24일 당초 정부안 보다 0.3조원 감액된 638.7조원 규모로 국회에서 의결되고, 1월 1일에 집행에 들어갔다. 이는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에 이뤄진 첫 순감이며, 2022년 본예산 대비 31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인 '역동적 경제와 행복사회 구현'을 목표로 편성된 예산이다. 2023년 올 한 해 정부는 국정기조의 확실한 구현을 위해 첫 번째 예산을 편성했으며, 그 간의 확장적 재정운용을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소외계층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이번 호에서는 2023년 우리나라의 경제여건 및 재정운용 방향과 재정총량 그리고 예산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본다.



2023년 예산과 주요 내용

박정화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pjh7387@kpfis.or.kr)

1. 2023년 경제여건 및 재정운용 방향

지난 11월 22일 경제협력기구(OECD)가 발표한 「경제전망」에 따르면 2023년 세계경제성장률은 2022년 3.1% 대비 0.9%p 하락한 2.2%로 전망했다. 2022년 대비 다소 둔화된 2023년 경제성장률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197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의 에너지 위기 발생에 의한 전 세계적인 고물가·저성장에 기인한다. 또한, 2023년 세계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위기 제외 시 1990년대 이후 최저 수준으로 전망되어 2023년 상반기까지 성장 부진이 이어지나,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 인상 영향이 완화되면서 2024년 세계경제는 2.7%로 완만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23년 1.8%, 2024년 1.9%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2023~2024년 중 2% 살짝 못 미치는 수준으로 다소 둔화된 전망을 예측하고 있다. 정부는 2023년 경제 상황에 대해서 민간소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수출 둔화로 경제성장률의 회복 흐름이 약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2023년 이후 부채의 상환부담 확대가 소비·투자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반도체 업황 하강 및 글로벌 수요 둔화와 미·중 간 긴장 고조 및 러·우 전쟁 등 보호주의 강화로 인한 한국의 공급망 재편의 발생 가능성이 경제성장세를 제약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표 1〉 **OECD의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p)

전망시점	2021년	2022년 전망			2023년 전망			2024년 전망
		2022년 9월	2022년 11월	조정폭	2022년 9월	2022년 11월	조정폭	
전 세계	5.9	3.0	3.1	0.1	2.2	2.2	0.0	2.7
G20	6.2	2.8	3.0	0.2	2.2	2.2	0.0	2.7
한국	**4.1**	**2.8**	**2.7**	**-0.1**	**2.2**	**1.8**	**-0.4**	**1.9**
독일	2.6	1.2	1.8	0.6	-0.7	-0.3	0.4	1.5
일본	1.6	1.6	1.6	0.0	1.4	1.8	0.4	0.9
영국	7.5	3.4	4.4	1.0	0.0	-0.4	-0.4	0.2
미국	5.9	1.5	1.8	0.3	0.5	0.5	0.0	1.0
중국	8.1	3.2	3.3	0.1	4.7	4.6	-0.1	4.1

자료: 기획재정부(2022.11.22.), 「경제협력기구(OECD) 「경제전망」 발표」 보도자료

이러한 불확실한 세계경제전망 속에서 정부는 작년의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하여 재정운용 방향을 설정했다. 2023년 우리나라 중앙정부 규모는 당초 정부안 639.0조원에서 0.3조원 감액된 638.7조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07.7조원 대비 31.0조원(5.1%)이 증가한 규모이며, 추경을 포함한 680조원을 지출한 2022년에 비해 약 40.8조원(-6.0%)이 감소한 수준이다. 이는 그간의 정부 주도의 확장재정에서 탈피하고 민간·시장 주도의 경제 도약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정의 역할을 재정립함으로써 그간 빠르게 늘어난 총지출 증가율의 하향 안정화를 꾀하기 위함이며[1], 나아가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화를 통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여력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2023년은 새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미래 대비 투자 등 국정기조를 충실히 반영하여 편성된 첫 번째 예산을 집행하는 한 해이다. 이에 따라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을 뒷받침하는 건전재정 운용과 함께 지속 가능한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재정의 총량을 관리하고 재정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2. 2023년 재정총량

재정수입

재정수입은 총지출 기준 625.7조원의 규모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2.1조원(13.0%)이 증가했다. 2023년 국세수입의 79% 이상을 차지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각각 전년 본예산 대비 24.7%, 40.2%, 7.4% 증가하면서 세입 증가에 기여할 전망이다. 다만, 빠른 경기회복에 따라 국세수입이 크게 증가한 2021~2022년과 달리 2023년은 기저효과·자산시장의 둔화 등으로 국세증가율의 둔화가 예상된다. 마찬가지로 국세외수입 역시 국민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가입자의 확대와 임금상승에 따른 수입의 전반적인 증가와 법정부담금 증가·정부배당 확대 등의 다각적인 수입확충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7.1%(15조원)가 증가한다. 다만, 일부 세외수입의 경우 글로벌 금리상승 등에 따른 한국은행 당기순이익 감소 및 정부 수납분 축소로 인하여 일시적인 감소가 예상된다. 2023년 조세부담률(당초 정부안 기준)은 2022년 본예산 대비 1.9%p 높아진 22.6%, 국민부담률은 2.1%p 높아진 30.7%로 전망된다.

1 각 연도별 총지출증가율 평균(본예산 기준)은 2009~2013년 5.9%, 2014~2017년 4.0%, 2018~2022년 8.7%이다.
2 국회 순증 규모는 2020년 -1.2조원, 2021년 +2.2조원, 2022년 +3.2조원, 2023년 예산 -0.3조원이다.

〈표 2〉 **2023년 재정수입**

(단위: 조원, %)

	2022년		2023년			2022년 본예산 대비		2022년 추경 대비	
	본예산 (A)	2차 추경 (B)	정부안	최종 (C)	국회 증감	증감액 (C-A)	증감률 ((C-A)/A)	증감액 (C-B)	증감률 ((C-B)/B)
총수입	553.6	609.1	625.9	625.7	-0.3	72.1	13.0	16.6	2.7
• 국세수입	343.4	396.6	400.5	400.5	0.0	57.1	16.6	3.9	1.0
소득세	105.8	127.8	131.9	131.9	0.0	26.1	24.7	4.1	3.2
법인세	74.9	104.1	105	105	0.0	30.1	40.2	0.9	0.9
부가가치세	77.5	79.3	83.2	83.2	0.0	5.7	7.4	3.9	4.9
• 국세외수입	210.2	212.4	225.5	225.2	-0.3	15.0	7.1	12.8	6.0
세외수입	26.1	28.3	25.2	25.0	-0.2	-1.1	-4.2	-3.3	-11.7
기금수입	184.1	184.1	200.3	200.3	0.0	16.2	8.8	16.2	8.8
조세부담률(%)	20.7	23.3	22.6						
국민부담률(%)	28.6	31.1	30.7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획재정부(2022.8.), 「2022년 예산안」 및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2022.12.24.), 「2023년 예산, 국회 의결·확정」 보도자료

재정지출

재정지출은 638.7조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1조원(5.1%) 증가에 그친 규모이며, 추경을 포함하여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679.5조원) 대비 40.8조원(-6.0%)이 감소한 규모이다. 또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639조원) 대비 0.3조원이 축소되었으며,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다[2]. 이는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로 총지출 인상폭을 상당 부분 흡수하여 전년 대비 대폭 줄어든 5.1%만 증가한 것이다.

지출 성격별로 살펴보면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이 각각 340.3조원, 298.4조원 규모이다. 의무지출은 2022년 본예산 대비 37.1조원(12.2%)이 증액됐으며, 재량지출은 6.1조원(-2.0%)이 감소되었다.

〈표 3〉 **2023년 재정지출**

(단위: 조원, %)

	2022년		2023년			2022년 본예산 대비		2022년 추경 대비	
	본예산 (A)	2차 추경 (B)	정부안	최종 (C)	국회 증감	증감액 (C-A)	증감률 ((C-A)/A)	증감액 (C-B)	증감률 ((C-B)/B)
총지출	607.7	679.5	639.0	638.7	-0.3	31.0	5.1	-40.8	-6.0
의무지출	303.2	329.7	341.8	340.3	-1.5	37.1	12.2	10.6	3.2
재량지출	304.5	349.8	297.3	298.4	1.1	-6.1	-2.0	-51.4	-14.7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획재정부(2022.8.), 「2022년 예산안」 및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2022.12.24.), 「2023년 예산, 국회 의결·확정」 보도자료

2023년 12대 분야별 재원은 국정과제 및 핵심 정책과제인 사회적 약자와 미래 대비에 관련한 분야에 집중 지원하여 배분했다. 분야별 예산 배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의 보장성 강화 및 취약계층 지원 확대 관련 재정사업을 주로 추진하는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약 226.0조원(총지출 대비 35.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 일반·지방행정 분야 112.2조원(17.6%), 교육 분야 96.3조원(15.1%), 국방 분야 57조원(8.9%), R&D 분야 30.7조원(4.8%) 등의 순이다.

2023년 총지출 증가율(2022년 본예산 대비 5.1%)을 기준으로 교육(14.4%), 일반·지방행정(14.4%), 외교·통일(6.7%) 분야 순서로 지출 증가율이 높았다. 교육과 일반·지방행정의 경우, 국세수입의 증가로 인하여 법정의무지출인 지방교육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이다[3]. 그다음으로 국방(4.4%), 보건·복지·고용(3.8%), R&D(3.0%), 농림·수산·식품(3.0%), 공공질서·안전(2.7%), 환경(2.5%) 분야의 경우 총지출 증가율에 미치지는 못하였으나 전년도와 비교하여 증가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 분야는 전년도 보다 감액됐다.

〈표 4〉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단위: 조원, %)

구분	2022년	2023년		증감		
	본예산 (A)	정부안 (B)	최종 (C)	국회증감 (C-B)	전년 대비 (C-A)	증가율
총지출	607.7	639.0	638.7	-0.3	31.0	5.1
1. 보건·복지·고용	217.7	226.6	226.0	-0.6	8.3	3.8
2. 교육 (교부금 제외)	84.2 (19.1)	96.1 (18.9)	96.3 (20.5)	0.2 (1.6)	12.1 (1.4)	14.4 (7.3)
3. 문화·체육·관광	9.1	8.5	8.6	0.1	-0.5	-5.5
4. 환경	11.9	12.4	12.2	-0.2	0.3	2.5
5. R&D	29.8	30.7	30.7	0.0	0.9	3.0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31.3	25.7	26.0	0.3	-5.3	-16.9
7. SOC	28.0	25.1	25.0	-0.1	-3.0	-10.7
8. 농림·수산·식품	23.7	24.2	24.4	0.2	0.7	3.0
9. 국방	54.6	57.1	57.0	-0.1	2.4	4.4
10. 외교·통일	6.0	6.4	6.4	0.0	0.4	6.7
11. 공공질서·안정	22.3	22.9	22.9	0.0	0.6	2.7
12. 일반·지방행정 (교부세 제외)	98.1 (33.0)	111.7 (36.4)	112.2 (36.9)	0.5 (0.5)	14.1 (3.9)	14.4 (11.8)

자료: 기획재정부(2022.12.24.), 「2023년 예산, 국회 의결·확정」 보도자료

재정건전성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관리한 결과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 모두 전년 대비 개선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 개선되었으며,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도 2차 추경 기준으로 70.4조원 적자보다 감소한 13.1조원 적자로 GDP 대비 -0.6% 규모로 개선되어 균형에 접근했다.

국가채무는 총지출 순감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규모 축소에 따라 당초 정부안 보다 0.4조원 축소된 1,134.4조원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약 70조원, 2차 추경 기준으로 약 66조원 증가한 수준이다. 다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경우 처음으로 50.0%(1,064.4조원)에 달한 2022년 본예산 대비 2023년은 49.8%로 -0.2%p 개선되었다.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임기 내(2024~2027년)에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고 재정준칙을 준수(관리재정수지 -3.0% 이내)하는 수준으로 중기 재정총량을 최대한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지출증가 속도를 억제하여 2026년 총지출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까지 조정할 예정이며, 또한 세수여건 개선 등을 통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의 경우 2023~2026년 -0.2%대 중반 수준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26년까지 50%대 중반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다.

〈표 5〉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단위: 조원, %)

	2022년		2023년		증감		2024년	2025년	2026년
	본예산 (A)	2차 추경	정부안 (B)	최종 (C)	국회증감 (C-B)	전년 대비 (C-A)	국가재정운용계획[1]		
총수입	553.6	609.1	625.9	625.7	-0.3	72.1	655.7	685.6	715.2
총지출	607.7	679.5	639.0	638.7	-0.3	31.0	669.7	699.2	728.6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	-94.1 (-4.4)	-110.8 (-5.1)	-58.2 (-2.6)	-58.2 (-2.6)	-0.0 (-0.0)	35.9 (1.8%p)	-58.6 (-2.5)	-57.4 (-2.3)	-56.6 (-2.2)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	-54.1 (-2.5)	-70.4 (-3.3)	-13.1 (-0.6)	-13.1 (-0.6)	0.0 (0.0)	41.0 (1.9%p)	-14.0 (-0.6)	-13.7 (-0.6)	-13.4 (-0.5)
국가채무 (GDP 대비, %)	1,064.4 (50.0)	1,068.8 (49.7)	1,134.8 (49.8)	1,134.4 (49.8)[2]	-0.4 (-0.0)	70.0 (-0.2%p)	1,201.2 (50.6)	1,271.9 (51.4)	1,343.9 (52.2)

주 1) 2024~2026년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전망치임
2) 2023년 경제전망 수정(2022.12.21. 2022년 성장률 5.2→4.3%, 2023년 성장률 4.5→4.0%)에 따른 경상 GDP 규모 변화 반영 시 2023년 국가채무비율은 50.4%로 상승

자료: 기획재정부(2022.8.), 「2022년 예산안」 및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2022.12.24.), 「2023년 예산, 국회 의결·확정」 보도자료

3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다.

3. 2023년 예산의 주요 내용

2023년 한 해 정부는 국정과제 뒷받침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하는 예산'을 기반으로, 재정을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을 목표로 운용할 계획이다. 특히, 서민·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소외계층 복지'를 바탕으로 ①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사회 구현, ② 민간주도 역동경제 뒷받침, ③ 국민안전·글로벌 중추국가 역할강화 등을 중심으로 집중 투자한다. 3대 투자 방향을 구성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2023년도 예산의 3대 중점 투자 방향**

3대 투자 중점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	민간주도 역동경제 뒷받침	국민안전·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 • 생활물가 안정 지원 •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 농·산·어촌 등 지역균형발전 • 저출산 대응	• 반도체 등 전략산업 육성 • R&D 고도화 • 디지털 혁신·탄소중립 대응 • 기업·산업 역동성 제고 • 중소벤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 과학기술 강군 육성 • 적극적 ODA 기반 외교협력 강화 • 일류 보훈체계 구축 •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 재난대응 및 공정한 법질서 확립

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 예산」 홈페이지(http://2023예산.kr)

첫째, 경제가 어려울수록 삶이 더 크게 위협받는 저소득층 등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계층·세대 간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 △생활물가 안정 지원,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농·산·어촌 등 지역균형발전, △저출산 대응 등의 핵심 사업에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 확대를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취약계층의 맞춤형 지원을 더욱 촘촘히 하고자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을 증액하여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6.1만개를 확대하고,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단가를 연 21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한다. 또한, 시설보호 종료 후 자립을 준비 중인 청년에게 사회정착을 위한 맞춤형 생활 지원 서비스를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대상을 확대하여 집중 투자한다.





둘째, 첨단 전략산업 육성과 과학기술력 제고, 중소·벤처 기업 도약 지원,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집중 투자한다. 이 중 R&D 분야는 반도체·우주 분야 등 초격차 전략산업과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에너지 전환, 저탄소 생태계 구축 사업에 집중 지원한다. 정부는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해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예정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예산을 1,000억원 지원하며, △반도체 관련 재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교육센터 신설에 200억원을 투자하고,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을 확대(6→8개) 개소한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생적 성장 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투자주도형 창업 지원(TIP) 등의 창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화, 수출·물류 지원 등 중소·벤처기업 혁신을 위해 집중 투자하고,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여파에 벗어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재기 지원, 경쟁력 강화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특히, 정부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약 3,525억원의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편의·산업경쟁력 강화에 직결되는 교통혁신을 위해 △수도권 GTX의 적기 완공, 신규 노선 검토에 투자하고, △도심항공교통(UAM), 개인형 이동수단 등 미래교통수단 조기 상용화를 지원한다. 또한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진출 위해 콘텐츠 분야 모태펀드에 신규출자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특화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재난 대응 역량 제고와 경제안보 역량 강화·전략적 ODA를 통한 국제사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집중 투자한다. 먼저, 홍수·가뭄 등 갈수록 빈번해지는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대심도 빗물 저류터널 설치 지원과 △스마트 예보 시스템 도입 등 사전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산불·긴급 구조에 활용도가 높은 대형 헬기 신규 도입, 노



후 헬기 교체를 지원한다. 또한, 국방·보훈 측면에서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에 관련한 첨단전략 증강에 투자를 확대하고, 장병의 사기진작을 위해 △보훈급여를 2008년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하며, △장병급식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상생 장병특식' 사업을 신설했다. 또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강화를 위해 월 1만원씩 수당을 인상하여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기 위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회원국을 대상으로 소규모 무상 원조를 지원하고, △전략적 가치가 높은 글로벌 보건·백신, 첨단 기술 등과 연계한 ODA를 확대하여 투자한다.

4. 3대 재정혁신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하에 중점 투자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3대 재정혁신은 ① 재정지출 재구조화, ② 재정총량관리 강화, ③ 재정운용의 효과성 제고이다.

첫째, 전략적 지출조정 등을 통한 전면적 재정지출의 재구조화이다. 정부는 집행점검·유사중복 정비 등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새 국정운용 방향성을 반영하여 민간역량 활용 및 공공부문 효율화를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재정지출의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우선, 정부는 지출재구조화의 4대 유형인 △정부-민간 역할 재정립, △재정 투자 효율화, △한시지출 정상화, △공공부문 솔선수범을 중심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예를 들어, 민간역량 활용을 위해 정부가 직접 주도하던 일자리·창업 지원 사업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민간시장을 구축할 우려가 있는 산업·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역시 민간주도로

개편하는 것이다. 나아가, 공공부문 측면에서도 재정 수반 행정위원회 246개 중 성과가 미흡했던 81개 조직을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공무원 보수도 장차관급 이상은 10% 반납하는 등 솔선수범을 강화하여 지출 재구조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둘째, 단순하고 엄격한 재정준칙의 도입으로 재정총량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목표이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의 안착을 위해 국제기준에 맞춰 준칙한도를 관리재정수지 -3.0% 이하로 설정하고 법률에 준칙한도를 명시하여 높은 수준의 구속력을 확보하고자 입법추진하고 있다. 경제위기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준칙적용을 면제하되 위기 종료 시에는 준칙기준을 복귀하고 건전화 대책을 수립토록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예산안과 함께 통과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 중이다.

셋째, 재정운용의 효과성을 제고한다. 정부는 △민간투자 확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사업구조 개편, △성과평가의 비효율 제거 등 성과평가의 효과성 제고, △예비타당성 관리 등으로 재정운용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교통·생활 인프라 확충 및 노후시설을 개량하여 민간투자 대상의 시설을 다양화하고, 사업방식의 다변화 및 수익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참여 유인을 제고하며 또한 재정·민자사업 간의 연계 강화를 통한 민자관리 체계를 혁신함으로써 민간투자를 확대한다. 그리고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하고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미래인재 양성에 투자하고자 한다. 특히, 성과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는 성과미흡 사업예산의 일정 비율을 삭감하는 원칙을 도입하여 평가결과의 환류를 제도화하고, 각 부처의 주요 성과지표와 목표달성도를 인포그래픽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 부처성과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불명확한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요건을 구체화·객관화하여 예비타당성 면제를 최소화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한다.

정부의 2023년 예산편성과 국가재정운용 방향을 종합해보면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과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복합위기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면서도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 조정을 실행하여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와 역동적 경제 뒷받침, 국민 안전 보장 등 세 가지 방향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 문헌

- 기획재정부(2022.8.), 「2023년 예산안」.
- 기획재정부(2022.8.),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
- 기획재정부(2022.11.2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발표」 보도자료.
- 기획재정부(2022.12.24.), 「2023년 예산, 국회 의결·확정」 보도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2.12.21.), 「2023년 경제정책방향」.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2023예산.kr)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assembly,go.kr/bill/main.do)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디지털 전환

김영미 한국정책학회장, 상명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2023년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각 분야마다 본격적인 매진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도 일정을 지연하기는 했지만 2023년도 예산안으로 638조 7천 276억원(총지출 기준)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한 해 동안 정부가 주력하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이다.

2023년도 정부 총 연구개발(R&D) 예산은 2022년도 29조 8,000억원에서 1조 3,000억원이 증액된 31조 1,000억원으로, 우주,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차세대원전 등 혁신을 선도하는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미래도전적 기술에 중점 투자를 제시했다.

새해에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경제갈등 등 난제가 이어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어 우리 정부에도 쉽지 않은 해가 될 것이라는 중론이다. 그럼에도 국내외 ICT 시장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이후 필요성이 확장되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빠르게 디지털화하는 것을 체감했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이 대세를 형성하는 전환기임을 함께 체험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기업도 업무 프로세스의 디지털화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확장하고 있으며, 공공부문, 정부도 디지털 혁신의 가치를 우위에 두고 있다.
민간에서도 디지털 플랫폼을 근간으로 업종 간 경계를 넘어 결합서비스의 확대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가트너가 주목하는 2023년 10대 전략기술을 보더라도 플랫폼, 인공지능, 지속가능성을 꼽고 있다. 디지털 전환이 더 빠르고 다양한 모습으로 생활 속 곳곳에 자리 잡으면서 변화를 그리기 위한 정책설계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전환

플랫폼(Platform)이라는 단어가 어느새 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친숙한 용어가 되었다. SNS 플랫폼, 콘텐츠 플랫폼, 거래 플랫폼 등 플랫폼의 유형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용 가치를 높이고 있다. 플랫폼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역에서 기차를 타고 내리는 곳'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다. 온라인에서 생산·소비·유통이 이루어지는 장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 연결과 상호작용을 통해 무한한 가치를 창조하는 시스템으로 통용된다. 기업은 인터넷 검색 엔진을 시작으로 콘텐츠와 스트리밍 서비스, 핀테크 등 산업 분야의 영역을 확장하면서 소비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유인책으로 제공한다. 정부도 전자정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행정과 민원의 전자화, 온라인화 단계를 넘어 '플랫폼 기반의 공공서비스 최적화'를 구축하고 있다. 플랫폼 정부는 정보, 소통, 서비스를 중심으로 생성되는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 공공정보의 전면적 개방과 공유를 통한 새로운 장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된다.
플랫폼 정부는 네트워크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간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극대화하고, 정부서비스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플랫폼에서 다양한 가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구축한 플랫폼에 사용자가 접근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이들의 부가가치가 증대되는 양상이다. 플랫폼 정부의 사용자는 국민, 기업, 정부 모두 포함된다. 여러 형태의 디지털 서비스와 데이터의 제공 및 분석을 위한 플랫폼 구축은 프로세스를 경감시키는 동시에 국민 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정부가 국민에게 향상된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편리하게' 제공한다는 전자정부의 구현을 가능하게 했다. 디지털정부는 새로운 국정운영의 패러다임 변화를 뒷받침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적 과제로서 성장을 거듭해 왔다. 특히 정부의 고객인 국민과 기업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실천수단으로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기술관료적 정부에서 고객지향적 정부, 투명한 개방적 정부, 민주적 정부로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지능

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전환은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술과 서비스가 만나 우리 생활의 변화는 물론 새로운 사회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디지털 사회의 생태계

신기술의 발전은 지속적으로 빠르게 진화되고 있다. 특히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은 솔루션 중심의 서비스 지향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의 개념은 이동통신망을 이용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 지능통신을 할 수 있는 사물통신 개념을 인터넷으로 확장하여, 사물은 물론, 현실과 가상세계의 모든 정보와 상호작용하는 개념으로 진화했다. 현재 우리 주변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IoT 서비스의 예를 들면 RFID 방식의 교통카드, 편의점에서 가격정보를 읽는 바코드, 택배 배송추적, ATM 기기, 내비게이션 등과 산업현장에서 교량·댐 안전관리, 공장·설비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사물인터넷은 초연결사회를 실현해 주는 주요 기술로 우리 주변에 이미 저변화 되어 있다. 사물인터넷(IoT) 환경이 성숙되고,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활용이 이어지면서 인터넷의 연결성은 생활공간에서 새로운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새로운 이론과 현상을 찾아내고 있다. 이미 인공지능은 환율이나 주식시장을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전망하고 경영·경제학에서는 새 이론을 검증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행정학이나 사회학, 도시학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에서 일어날 문제점을 시연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모색한다. 도시건설과 개발, 교통망의 효율적 구성, 최적의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도출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다. 인공지능은 더 이상 공학 분야의 학문으로서만이 아닌 모든 학문 분야와 융합하여 영역을 최적화시키고 있다. 이에 다양한 맥락을 고려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생각의 전환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지능정보 신기술 기반의 생태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가 다각적으로 융합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공지능을 토대로 변화하는 환경 분석과 공감대의 형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데이터의 생성과 관리 및 소유, 활용에 이르기까지 요구되는 과정적 지원체계도 공공차원에서 과감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인공지능은 축적된 데이터를 기초로 그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으므로 밀착된 연계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과감한 지원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필요

디지털 사회에서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의 혁신이 필수적이다.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던 오프라인의 업무 프로세스가 온라인상에서 단순하고 명확하게 정리될 때, 비로소 국민에게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프로세스 혁신은 부처 간 칸막이 해소에서부터 출발하며, 예산제도와 연동된 협업의 유도가 필수적이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모바일 정부를 지향하며, 보다 다양한 서비스 콘텐츠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파편화되어 제공되고 있는 여러 서비스를 하나의 운영체제를 통해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랫폼 기능이 강조된다.

ICT 기술을 바탕으로 사람, 프로세스, 데이터, 사물이 서로 연결됨으로써 지능화된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와 혁신의 창출이 가능해지는 사회로 급속히 접어들면서 기업은 물론 정부의 역할에 새로운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사회적 연결이 극대화되면서 기존에 제공해오던 정부서비스 지원방식도 신속한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디지털 사회에서 모바일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의 서비스콘텐츠는 무한대로 진입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역량과 경쟁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무엇보다 민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



공부문은 판을 깔아주고 독려해주는 거버넌스의 구심점 역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소통과 공유를 통해 초협력 사회로 가는 발판을 마련하고 '기술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이 우선해야 함이 강조된다.

정부의 새로운 역할과 메타거버넌스

민간기업의 참여는 정부혁신의 원동력이 되면서 동시에 딜레마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메타거버너'로서의 정부의 새로운 역할을 기대하며, 정부로부터 메타거버넌스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메타거버넌스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계층제 거버넌스, 네트워크 거버넌스, 시장 거버넌스 등 세 가지 사회적 조정 양식의 최적 조합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서 정부의 새로운 역할과 관련하여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개념으로 메타거버넌스를 들고 있다. 다양한 사회 조정양식의 혼합으로 협력적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활성화하여 성공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메타거버넌스이다. 메타거버넌스는 거버넌스의 거버넌스이다.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한계 중 하나는 행위를 통제하는 단일의 권력 중심이 없어서 네트워크가 공유한 목표를 향해 일사불란한 행동이 어렵다는 점이다. 네트워크에 영향을 주고 네트워크가 단일의 대오를 이루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유도하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

하다. 이러한 활동을 메타거버넌스라 하고 이러한 활동을 담당하는 개인이나 조직을 메타거버너(Meta-governors) 또는 네트워크 매니저(NM)라고 한다. 메타거버너의 역할은 네트워크 구성원이면 어느 누구라도 수행할 수 있지만 통상 정부 기구가 담당한다. 정부는 메타거버너의 적격기준인 NATO(Nodality, Authority, Treasure, and Organization)를 충족시키는 행위자로 정부 기구를 능가할 조직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메타거버너의 역할은 신뢰 형성, 갈등 해결, 합의유도, 목표의식 유지 등이 주요 쟁점이다.

사회 전환의 패러다임 국면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공공의 가치체계 확립과 정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제기되는 딜레마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플랫폼 네트워크를 조율하고 정부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메타거버너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 글은 필자가 2022년도 세계일보 '칼럼'에 기고한 글과 '지역정보'에 기고한 글에 기초하여 대폭 확장한 것입니다.
본 칼럼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여야 예산전쟁,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1]

옥동석 한국재정정책학회장,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

2023년도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예산격돌은 그 어느 때보다 극렬했다. 물론 이전에도 여야의 의견대립은 항상 있었지만 여야 합의든지 다수 여당 날치기든지 예산안은 나름 기일을 준수하면서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전례가 없는데, 국회가 여소야대(與小野大)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대 야당이 예산안을 일방 삭감하여 수정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까지 강력 표명했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의회의 예산권한이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국에서는 여야의 극렬한 예산 대립을 예산전쟁(Budget War)이라 표현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달리 여야의 예산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가 결여되어 있다. 제헌헌법 이래로 70여 년 만에 우리 예산제도의 헌법적 결함이 작년 말 마침내 현실이 된 것이다. 제헌헌법 이래 우리 헌법은 행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국회가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이다. 헌법 제57조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는 국회가 지출예산 각항을 증액시키지는 못하지만 감액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것이다. 만약 국회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싶다면 지출예산을 대폭 삭감할 수 있는데, 이때 나타날 수 있는 국가적 위기를 우리 헌법은 방치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나타난 우리 헌법의 이러한 결함은[2], 국회와 행정부가 예산안을 반드시 합의하리라는 순수한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예산의 증액을 도모하기 때문에 행정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다. 또한 국회의원들은 예산집행에서도 행정부에 요구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감액의 권한을 함부로 행사할 수 없다. 행정부 관료들 역시 국회의원들의 예리하고도 집요한 감액 요구를 둔화시키기 위해서는 증액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는 타협을 원한다. 이 때문에 예산안의 여야 합의는 국회와 행정부가 대립하는 여소야대의 국회에서도 비교적 순탄하게 이뤄질 수 있었다.

그런데 여야 정권교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며 여야 간의 정치적 대립은 점점 격화되고 있다. 특히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되면 국회와 행정부의 대립은 행정부를 마비시킬 정도로

증폭될 수 있다. 작년 말에 우리가 관찰한 것처럼, 거대 야당은 자신의 정책의지를 관철하고자 행정부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감액한 수정예산안을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다. 반면 여당은 예산이 일방 감액되더라도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반하는 사업은 결코 증액할 수 없다고 맞설 것이다. 더 나아가 여당은 대통령의 국정 방향에 반하는 사업의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대선불복이라고 반발할 것이다.

한국 재정헌법의 결함

예산안에 대한 국회와 행정부의 이 같은 대립은 우리나라 특유의 헌법 제도에서 비롯한다.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의 헌법에서는 '예산은 법률로 확정한다'는 명문상의 조항이 없기 때문에 '예산의 비법률주의'로 해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국회가 의결한 지출예산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또는 재의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미국에서는 예산이 법률로 확정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의회가 3분의 2 이상으로 재의결하지 않는 한 대통령의 예산의지는 존중된다.

'의회 의결→대통령 거부권→의회 재의결'의 절차로 예산이 확정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헌법은 증액과 감액의 권한을 행정부와 국회에 나누어 부여해 놓고 예산에 대한 여야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 합의를 요구하는 한국 헌법의 이러한 순수함은 국회와 행정부의 격한 대립 속에서 한낱 순진한 발상으로 전락한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할수록 국회와 행정부의 대립은 더욱 빈번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적대적인 대립 속에서도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단 1표로도 승패가 갈리는 투표처럼- 최종 결정을 만들어내는 명시적인 절차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행정부 예산안이 큰 수정 없이 의회를 통과한다. 행정권을 장악한 정당들의 의지를 존중하여 행정부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되는 정치적 관례 또는 제도가 구비되어 있는 것이다. 영국식 내각책임제에서는 의회가 행정부 예산안을 수정할 경우 의회의 해산과 총선이 이어진다. 예산안의 수정은 내각불신임과 연계되는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또한 내각책임제에서는 의회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예산안의 수정은 극히 예외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

1 본 칼럼은 2022년 12월 18일에 게재된 '되풀이되는 與野 예산전쟁,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국가미래연구원, News Insight)를 수정 보완했는데, 재게 허용에 감사드립니다.

2 제헌헌법 제정 당시 유진오 박사는 국민부담의 증가와 감소라는 측면에서 예산의 증액과 감액을 이해했다. 따라서 감액과 달리 증액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건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당시의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옥동석. (2022). "제헌헌법 재정조항과 최초의 예산안", 「한국의 재정정보 변천에 관한 연구: 1980년대 이전」, 한국재정정보원, pp.25~26 참조.

프랑스의 준대통령제에서는 -또는 이원집정부제- 여소야대의 동거정부가 나타날 수 있지만 행정권을 장악한 수상이 편성한 예산안은 대부분 수정 없이 의회를 통과한다. 프랑스 헌법 제40조는 지출증가와 세입감소에 대한 의회의 제안을 금지했고, 제47조는 의회가 70일 내에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행정부가 명령(Ordinance)으로써 예산을 확정할 수 있도록 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 만성적인 정치불안정 속에서 국력의 심각한 저하를 경험했던 프랑스 국민들은 1960년대 제5공화국 헌법에서 행정부 우위의 헌법조항들을 다수 구비함으로써 정치적 안정과 국가적 번영을 이룩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재정헌법의 결함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꾸준히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3]. 그런데도 우리 정치권은 예산안이 마땅히 여야 합의로 처리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물론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때에는 이러한 믿음이 실현될 수 있겠지만 긴축재정으로 반전하는 순간에는 작동하기가 어렵다. 예산 규모가 증가할 때는 행정부와 국회의원들이 매년 예산증가분을 나눠먹기로 적절하게 타협할 수 있다. 그러나 예산 규모 증가가 멈추는 순간 국회의 증액 여지가 줄어들면서 행정부와 국회의 협상은 곧바로 전쟁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한 언론기사는 2022년 말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여야의 예산안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이면에는 그간 '국회 몫'으로 여겨져 온 증·감액 규모를 둘러싼 간극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예년처럼 예산안 중 1% 내외(약 5조원)의 증·감액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0.5%가량인 3조원 정도만 손볼 수 있다'는 태도다. …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예산안 감액 규모에 대한 이견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못지않게 컸기 때문이다. 핵심은 '국회의 1% 증·감액'을 둘러싼 힘겨루기다."[4]

예산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

이제 우리는 국회와 행정부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는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승복하는 최종적 예산에 이르는 제도적 절차를 구비해야 한다. 그리고 그 제도는 '예산의 비법률주의'와 '증액 및 신비목 설치금지'라는 헌법상의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도 작동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방안으로써 우리는 다음 두 가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첫째, 조문의 규정에 충실하여 헌법 제57조의 '각항'을 예산의 프로그램 단위인 '항'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예산항목은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내역사업 등 계층적인 체계로 구성되는데, 일반적으로 국회가 의결하는 입법과목은 장, 관, 항에 한정되고 그 이하의 예산항목들은 행정부가 재량으로 편성할 수 있는 행정과목으로 간주된다[5]. 이는 마치 법령 체계 내에서 국회가 의결하는 법률과 행정부가 결정하는 시행령이 구분되어 있는 것과 같다. 지금까지 헌법 제57조의 행정부 증액동의는 세세항 단위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제 조문상의 용어에 충실하여 항

단위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을 구분함으로써, 국회의 심사는 예산의 각항으로 표현되는 입법과목 사이의 '전략적 예산배분'에 주력할 수 있게 된다. 행정부는 각항의 금액 범위 내에서 전략적 목표와 성과지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세항, 세세항, 내역사업들을 설계해야 한다. 국회와 행정부의 분업체계가 이와 같이 형성된다면 국회가 각항의 금액을 일방 삭감하더라도 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극단적이지 않다. 또한 국회의 증액도 각항에 한정될 것이기에 그 하위의 세항, 세세항, 내역사업 등에 대한 선택은 행정부 재량에 맡겨진다. 국회가 세항, 세세항 등에 대해 증액과 감액의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그 최종 선택은 행정부에 맡겨져야 한다.

둘째, 지출예산의 증액과 감액에 대한 국회의 의결을 반드시 법률로서 확정하는 것이다[6]. 예산 그 자체는 법률의 형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산안의 변경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회가 법률로서 의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률로 의결한다면 국회가 요구하는 증액과 감액의 내용은 국민들이 검토할 시간을 갖게 된다. 법률의 형식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형성되는 여론은 국회의 예산수정을 감시하게 될 것이다. 헌법 제57조로 인하여 증액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일방적 거부가 가능하지만, 감액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거부의견을 참조하여 국회가 재의결할 기회를 갖게 된다.

우리 예산제도의 헌법적 결함을 교정하기 위한 이 두 가지 수단은 국회의 예산권한을 제한하는 것이기에 매우 과감하고도 도전적인 과제다. 그러나 예산제도에 대한 국제적 비교연구에 정통했던 세계은행의 리너트(Ian Lienert) 박사가 2010년 12월 한국을 방문하여 발표한 논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7]. 그는 많은 예산권한을 가지고 있는 미국 의회의 예산제도를 한국이 본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전략적 관점에서 거시예산 심사에 주력하고, 미시예산에 대해서는 행정부의 편성권을 존중하여 사후점검과 감독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한다면, 국회는 이 두 가지 도전적 과제를 반드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

3 옥동석. (2015). 「권력구조와 예산제도」, 21세기북스 참조.

4 동아일보(2022.12.19.), '지역구 챙기기용 정부예산 감액 대치...野 1% 與 0.5%'.

5 국가재정법 제47조는 장·관·항 금액의 이용(移用)이 국회의 의결로 가능하고, 제46조는 세항 금액의 전용(轉用)이 기재부 장관의 승인으로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6 세입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세 수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련 세법을 변경해야 한다. 2022년 12월의 국회 예산심의에서는 법인세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여야 간의 첨예한 이슈가 되었다. 세법 개정에 대한 여야 이견이 예산안의 국회의결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행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에는 세법 개정이 불가하다는 국회 내부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7 Ian Lienert. (2013.11.). "국회의 예산권한: 과연 한국은 미국 의회의 관행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재정포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pp.60~66.

본 칼럼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재정당국은 2023년에 무엇을 해야 할까?

전영준 한국재정학회장,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2023년은 여러 측면에서 현 정부가 도전에 직면하는 해가 될 것이다. 세계적인 경기후퇴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향후 상당 기간 동안 해소되지 않아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줄 것이다. 2023년 재정운영도 현 정부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2023년은 현 정부 자체적으로 편성한 예산을 운용하는 첫해이며, 정부가 공언한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첫해이며, 재정준칙의 입법화, 지출구조 조정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 기조 확립을 위한 제도 개편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여야 하는 해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편을 둘러싼 환경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먼저 현 정부의 재정운용과 관련된 국회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23년 예산안은 예산심의 확정기한을 훌쩍 넘겨 12월 24일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2023년 예산에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과 관련된 예산이 반영되지 않거나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경우가 많다. 또한 예산안 통과의 걸림돌이 되었던 법인세법 개정도 당초 개정안에 비하여 대폭 후퇴한 안으로 개정되었다. 다음으로 경기회복의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들로부터 받은 유산들은 재정운용에 대한

재량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있다. 2017년 36.0%이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021년에는 46.9%로 증가했으며, 공무원 신규 임용의 대폭적인 증가를 포함하여 공공부문 확대정책으로 인한 향후 정부의 의무적 지출 증가는 현 정부의 재정운용의 큰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우호적이지 못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2023년은 향후 한국 재정의 항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해로서 정책과제들이 산재해 있으며 이러한 정책과제 수행의 성공 여부가 한국의 정부재정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이다.

2023년 예산안과 2022~2026년 중기재정계획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보다도 재정건전성 제고로의 재정정책 기조의 전환일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준칙의 입법화를 공언했으며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안은 관리지표를 '관리재정수지'로 하고 정부채무를 60%를 한도로 관리하고 관리재정수지적자를 GDP의 3% 이내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재정준칙을 준수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관리재정수지적자를 GDP의 2.5~2.6% 수준으로 관리하여 2026년에 국가채무를 GDP의 52.2%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중기재정계획이 제시한 내용이다. 최근의 확장적 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공언은 그 자체 의미가 있으나 이러한 정책기조의 전환이 예산안과 중기재정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먼저, 정부지출 규모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정부의 총지출 예산은 2023년 638.7조원으로서 추경을 포함한 2022년 예산 679.5조원에 비하여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본예산 607.7조원에 비하여 5.1% 증가한 것이다. 더욱이 2022년 이전의 본예산(2019년 476.1조원; 2020년 481.8조원; 2021년 482조원)과 비교하면 2023년 정부지출 예산이 여전히 큰 규모라고 볼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여러 차례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정부지출예산은 큰 규모로 증가했고 이 결과 2022년 본예산이 처음으로 600조원를 넘어서게 되었다. 이러한 2022년 본예산을 초과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정부 재정건전성 제고에 부합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사태를 관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늘릴 수밖에 없었던 재정지출을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정부지출구조 조정을 통해 정부지출을 증가를 억제하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정부지출구조 조정과 관련하여 여러 관련 제도 개편이 필요할 것이다. 향후 2022~2026년 중기재정계획은 2026년까지 재정지출 증가율을 평균 경상성장률과 동일한 수준인 연평균 4.6%로 설정했다. 또한 지출 중 의무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7.5%가 불가피하므로 재량지출을 1.5%로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량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여 재정지출 증가율을 억제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의무지출 증가 억제를 통해 정부의 재정운용의 신축성을 제고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현재와 같이 경기침체가 지속될 가능성

이 높고 또한 경제위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필요시 경제안정화를 위한 정부재정의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의무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거론되고 있는 사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는 내국세분 교부금이 내국세 총액의 일정부분(20.27%)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재정지출 소요액과 상관없이 일정금액을 교육재정에 배분하는 방식은 비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을 초래하고 다른 부문의 재정지출 여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문제점의 인식에서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제시했으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미흡해 보인다. 교육재정 소요액 산정 시 학령인구 수 등을 고려한 개편이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제도 개편의 논의와 제도개편이 2023년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의무지출 증가 통제를 위해 필요한 것은 사회보험개혁이다. 현 정부의 집권 기간 동안에는 가시화되지 않겠지만 사회보험재정 위기는 향후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의 재정불안정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며 또한 국민건강보험재정의 불안정성도 국민연금보다 더 빠른 시기에 정부재정의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 국민연금보험료와 연금수급개시연령을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개편안이 제시되고 있다. 거론되고 있는 연금보험료 인상 폭이 국민연금 재정불안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하지만 문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국민연금 5차 재계산 연도인 2023년에 결실을 맺기를 희망한다.

국민건강보험급여 지출액의 빠른 증가 문제는 국민연금보다 더 이른 시기에 가시화될 것이다. 건강보험급여지출액은 2012~2021년 기간 동안 금액 기준으로 2배가 되었으며 GDP 대비 비중도 이 9년 기간 동안 1.1%p 증가했다. 건강보험료율도 2012년 5.8%이던 것이 2021년에 6.86%로 높아졌고, 2023년에는 7.09%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며 2026년에는 8%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강보험급여 지출액 증가는 인구의 고령화, 소득의 상승, 지속적인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등에 기인하지만, 현행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급여지출액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며 이는 향후 재정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사회보험제도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제도 개편이 조속히 가능하면 2023년 내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 세법개정안의 특징은 법인세율 인하를 비롯하여 일부 개편안에 성장친화적인 개편안이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법인세율을 인하함으로써 투자 등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여 경제의 활력을 늘리는 것이 이러한 세법개정의 취지라고 정부는 밝히고 있다. 이러한 개편은 지난 수년 동안 보기 어려웠던 성장친화적 세제개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개편이라고 생각한다. 법인세 감세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지

만 많은 기존의 연구에서 성장을 저해하는 조세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이들 조세보다 성장 저해효과가 덜한 조세로 소비세와 재산과세를 들 수 있다는 것은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연구결과이다. 법인세 감세안이 당초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최저세율 10% 적용 과세표준을 확대하려고 하던 것이 모든 과표구간에 걸쳐 세율 1%p 인하하는 안으로 축소되어 세법개정에 반영된 것은 아쉬움이 있는 대목이다. 더욱이 국회가 법인세 감세안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던 이유가 초부자 감세라는 점은 주식투자가 대중화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소액투자가들이라고 대기업 주식을 구입하지 않는가? 2023년에는 성장친화적인 세법개편의 측면에서 추가적인 법인세 감세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2023년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중기적 관점에서 필자의 의견을 기술했다. 필자가 2023년에 국한하지 않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2023년 동안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각종 개편에 대해 기술한 이유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2023년은 현 정부 자체적으로 편성한 예산과 이에 따른 중기재정운영계획이 실행되는 첫해이며 또한 2023년의 제도 개편이 그 이후 재정운용 방향을 결정하는 개편이 될 것이라는 예상에 기인한다. 또한 현 정부가 공언하고 있는 근본적 개편, 즉 연금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 그리고 이에 덧붙인다면 건강보험개혁의 성공 여부가 정부 재정건전성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과거 확장적 재정운용의 추세를 재정건전성 기조로 전환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닐 것이다.

혹자는 경기회복이 조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부양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나 경기안정화를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에 못지않게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을 가려내어 이들을 정리하는 작업도 중요할 것이다. 과거 여러 정부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대규모 정부 프로젝트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시행한 예도 여럿 들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정부지출의 누적 재정승수가 1보다 작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는 점도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재정건전성 제고와 정부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경기안정화 정책의 효과성 제고가 양립할 수 있는 제도 개편과 재정운용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칼럼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달의 재정통계 FOCUS

주요 내용

- 국회 심사 과정에서 2023년 총지출 규모가 639.0→638.7조원으로 정부안 대비 △0.3조원 순감
  - 2022년 본예산 대비 +31.0조원(+5.1%), 2022년 2차 추경 대비 △40.8조원(-6.0%)
- 국가채무 △0.4조원, 재정수지 불변→건전재정 기조 견지

재정총량

	총수입	총지출	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
2023년 예산	**625.7**조원	**638.7**조원	**58.2**조원 적자 GDP 대비 -2.6%	**1,134.4**조원 GDP 대비 49.8%
정부안 대비	0.3조원(13.0%) 감소	0.3조원(5.1%) 감소	0.0조원	0.4조원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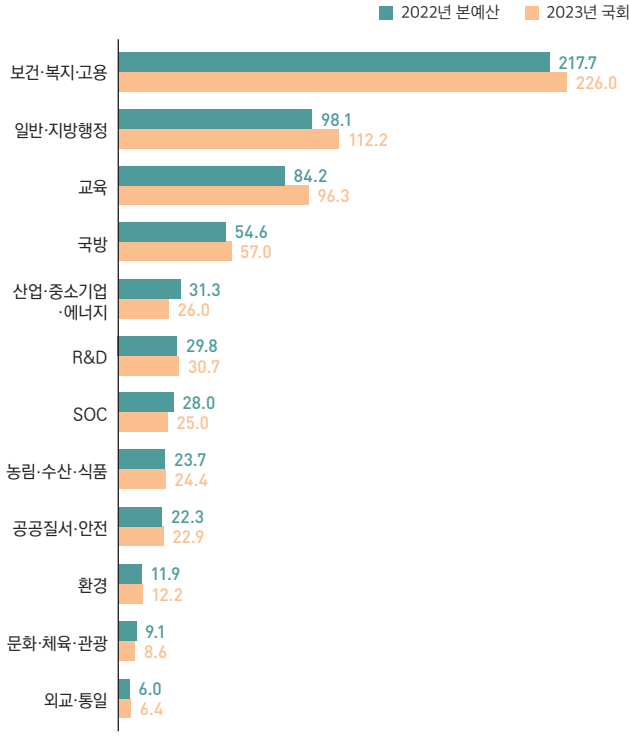
2023년 재정운용 모습

(단위: 조원, %)

	2022년		2023년		증감		
	본예산 (A)	2차 추경	정부안 (B)	최종 (C)	국회 증감 (C-B)	전년 대비 (C-A)	(%)
총수입	553.6	609.1	625.9	625.7	△0.3	+72.1	13.0
총지출	607.7	679.5	639.0	638.7	△0.3	+31.0	5.1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	△94.1 (△4.4)	△110.8 (△5.1)	△58.2 (△2.6)	△58.2 (△2.6)	△0.0 (△0.0)	+35.9 (+1.8%p)	- -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	△54.1 (△2.5)	△70.4 (△3.3)	△13.1 (△0.6)	△13.1 (△0.6)	+0.0 (0.0)	+41.0 (+1.9%p)	- -
국가채무 (GDP 대비, %)	1,064.4 (50.0)	1,068.8 (49.7)	1,134.8 (49.8)	1,134.4 (49.8*)	△0.4 (△0.0)	+70.0 (△0.2%p)	- -

* 2023년 경제전망 수정(2012년 21일, 2022년 성장률 5.2→4.3%, 2023년 성장률 4.5→4.0%)에 따른 경상 GDP 규모 변화 반영 시 2023년 국가채무비율은 50.4%로 상승

12대 분야 재원배분



* 일반·지방행정, 교육 분야는 교부금 포함 금액임

(단위: 조원, %)

복지(3.8%)
-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고 인상 등 기초생보 보장성 강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국방(4.4%)
- 병 봉급 인상, 한국형 3축 체계 관련 첨단 전력 증강 관련 투자 확대

산업·中企(-16.9%)
-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한시 지원 종료
- 반도체, 원전 등 미래전략산업 투자 등 확대

R&D(3.0%)
- 7대 핵심 전략기술 및 6대 미개척 도전 분야 기술 중점 투자

SOC(-10.7%)
- 완료소요, 지방이양 등 반영
- SOC 첨단화, 노후 SOC 안전 투자 확대

환경(2.5%)
- 탄소감축 지원 강화, 녹색금융 공급 확대 등

문화(-5.5%)
- 지방이양 소요 등 반영
- 콘텐츠·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은 확대

* 괄호 안 수치는 2022년 본예산 대비 국회 확정 예산에 대한 증감률임

국회 심의과정 주요 증액



민생경제·취약계층 지원
- 서민 생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확대
- 보육·양육서비스 질 제고
-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 태풍 피해지역 지원
- 농산어촌 지원 강화
- SOC·R&D·문화 분야 등 기타 민생·지역현안 사업 반영

미래 대비 및 안보·안전 투자 강화
- 고등·평생교육 투자 강화
-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지원
-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투자 강화
- 마약 등 민생범죄 예방·대응 강화
- 첨단무기 도입, 보훈 수당 등 국방·안보 사업 강화



2022년 10월 기준 재정동향

우수연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suyeon0520@kpfis.or.kr)

총수입

537.6조원
(누적 기준)

2022년 예산
609.1조원

537.6조원
진도율 **88.3**%

총지출

580.7조원
(누적 기준)

2022년 예산
679.5조원

580.7조원
진도율 **85.5**%

통합재정수지

43.1조원 적자
(누적 기준)

관리재정수지

86.3조원 적자
(누적 기준)

국가채무

1,038.2조원
(누적 기준)

주: 구성항목별 합계는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2.12.

국유재산 규모

1,343.9조원
(누적 기준)

행정재산
1,003.0조원
74.6%

일반재산
340.9조원
25.4%

국유재산 수입

2,587억원
(누적 기준)

매각대
2,351억원
90.9%

대여료
116억원
4.5%

변상금
119억원
4.6%

국유재산 취득

10,013억원

국가가 매수, 교환 등을 통해
자산상의 순증을 가져오는 행위

국유재산 처분

1,483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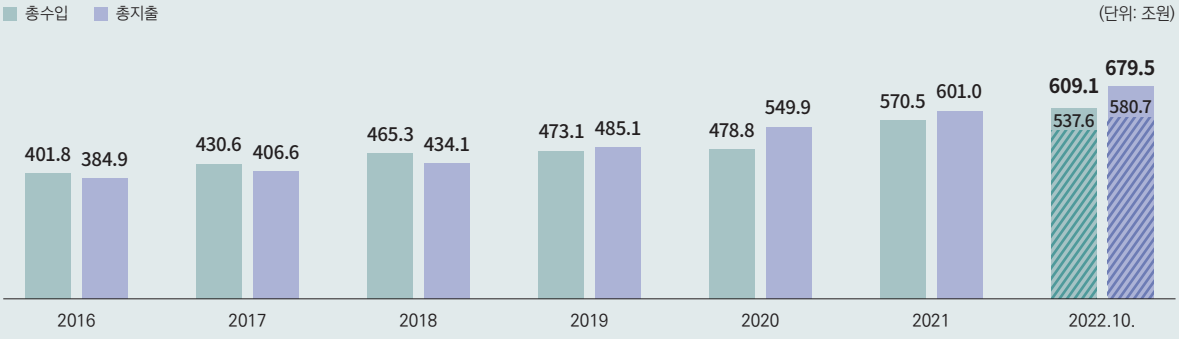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행위

총수입 · 총지출

총수입
537.6조원
진도율 **88.3**%
전년 동기 대비 **+47.8**조원
2022년 총수입 예산 **609.1**조원 대비

총지출
580.7조원
진도율 **85.5**%
전년 동기 대비 **+71.5**조원
2022년 총지출 예산 **679.5**조원 대비

주: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예산 대비 당월 누계 규모의 비율을 의미. 2022년 예산은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주: 2021년까지는 결산, 2022년은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국세수입
355.6조원
전년 동기 대비 **+48.2**조원
세수진도율 **89.7**%

세외수입
25.3조원
전년 동기 대비 **+1.5**조원
세수진도율 **89.4**%

기금수입
156.5조원
전년 동기 대비 **-2.0**조원
세수진도율 **85.0**%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99.0**조원

주: 세수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 대비 당월 누계 세입 규모의 비율을 의미

예산지출
372.1조원
전년 동기 대비 **+26.1**조원
진도율 **82.7**%

=

일반회계
322.2조원

+

특별회계
49.9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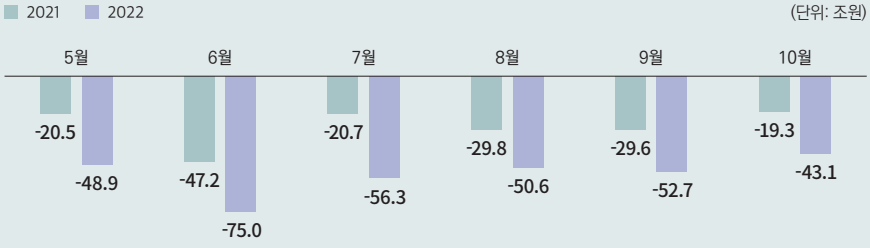
기금지출
197.3조원
전년 동기 대비 **+36.6**조원
세수진도율 **85.9**%
사회보장성기금 지출 **55.7**조원

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43.1조원 적자

전년 동기 대비
-23.7조원



관리재정수지

86.3조원 적자

전년 동기 대비
-18.7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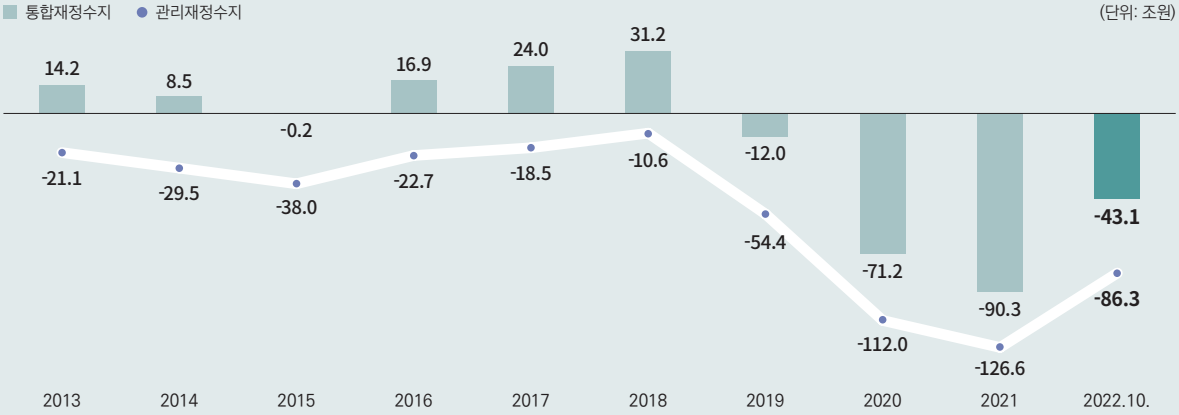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3.3조원 흑자

주 1)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
2)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4개 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방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의미
3)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차감하여 산출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주: 2021년까지는 결산, 2022년은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국가채무

중앙정부 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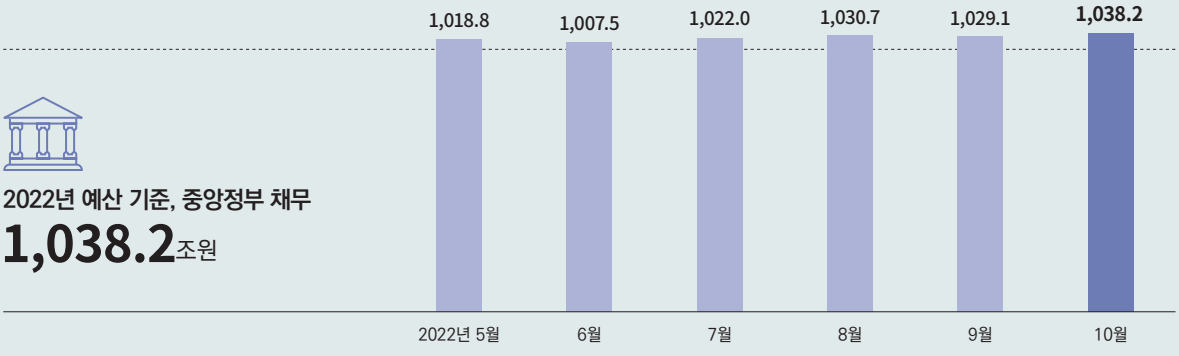
1,038.2조원



전월 대비 **+9.1**조원

전년 대비 **+99.1**조원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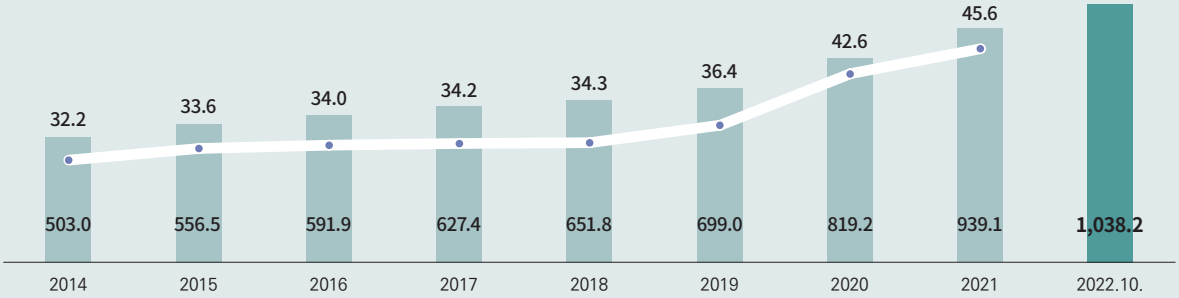


2022년 예산 기준, 중앙정부 채무

1,038.2조원

누적채무 ● GDP 대비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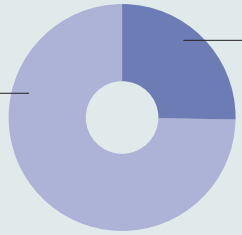


주 1) 중앙정부 채무 기준
2) 2021년까지는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
3) 2022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한국은행 GDP 규모 확정 시 제공 예정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www.openfiscaldata.go.kr)

국유재산

국유재산
1,343.9조원

전년 동기 대비
+170.8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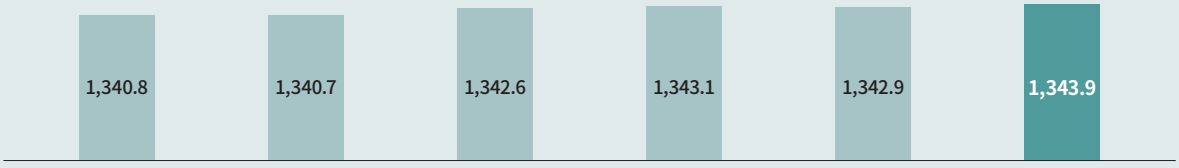


행정재산
1,003.0조원
74.6%

일반재산
340.9조원
25.4%



(단위: 조원)



주: 2022년 자료는 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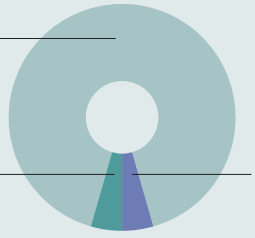
국유재산 수입

국유재산 수입
2,587억원

전년 동기 대비
+1,129억원

매각대
2,351억원
90.9%

변상금
119억원
4.6%



대여료
116억원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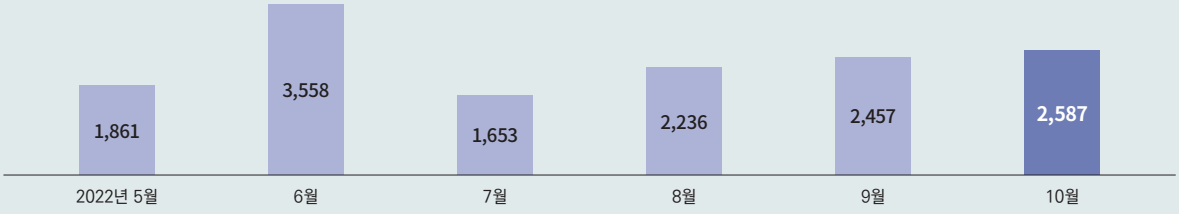
토지, 건물 등
1,444억원
61.4%

재고자산
906억원
38.5%

기타고정자산
1억원
0.04%

주 1) 매각대: 일반재산을 국가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고 수납한 대금
2) 변상금: 사용허가·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
3) 구성항목별 합계는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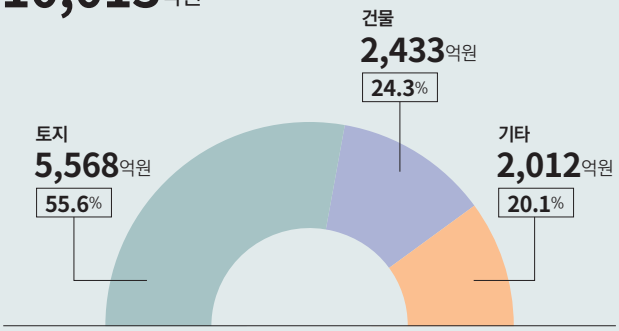


주: 2022년 자료는 잠정

국유재산 취득·처분

국유재산 취득

10,013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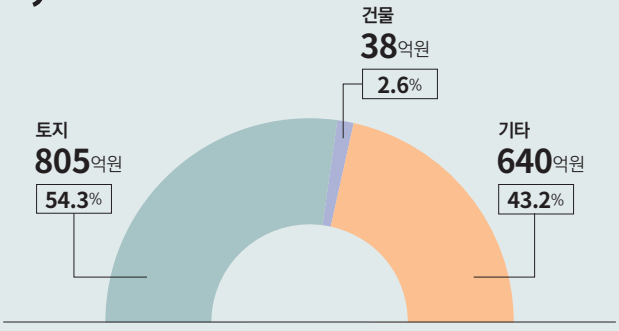


(단위: 억원)

	매매	교환(%)	기타(%)
합계	2,826(100.0)	167(100.0)	6,949(100.0)
토지	256(8.8)	167(100.0)	5,144(74.0)
건물	1,036(35.8)	-	1,397(20.1)
기타	1,604(55.4)	-	408(5.9)

국유재산 처분

1,483억원



(단위: 억원)

	매매	교환(%)	기타(%)
합계	1,196(100.0)	170(100.0)	116(100.0)
토지	573(47.9)	146(85.9)	86(74.1)
건물	6(0.5)	24(14.1)	8(6.9)
기타	618(51.7)	-	22(19.0)

주: 구성항목별 합계는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공급망

이달의 이슈키워드

공급망 투자 중소기업 자산 기업 미디어 학교
K-게임 월드컵 방송 노동자 대학 예산 소방



지난 한 달간 정부 여론 및 키워드 분석시스템의 데이터분석 결과 '공급망'의 언급량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물류', '글로벌', '생산' 등이 주요 연관 키워드로 도출됐듯이,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글로벌 물류대란에 대한 우려가 공급망에 대한 관심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공급망 및 물류의 안정화를 위해 제도, 재정사업 등으로 지원한다. 이번 <나라재정>에서는 물류 및 공급망 안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본다.

서영훈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youngseu@kpfis.or.kr)

물류 ✕ 투자 ✕
글로벌 ✕ 기술 ✕
생산 ✕ 공장 ✕
중국 ✕ 정부 ✕
반도체 ✕ 원자재 ✕
시장 ✕ 확대 ✕
배터리 ✕ 우크라이나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
행정안전부 혜안시스템,
통계청 뉴스기반통계검색 서비스,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 등 키워드 재구성(2022.12.8.)
수집기간: 2021.11.9.~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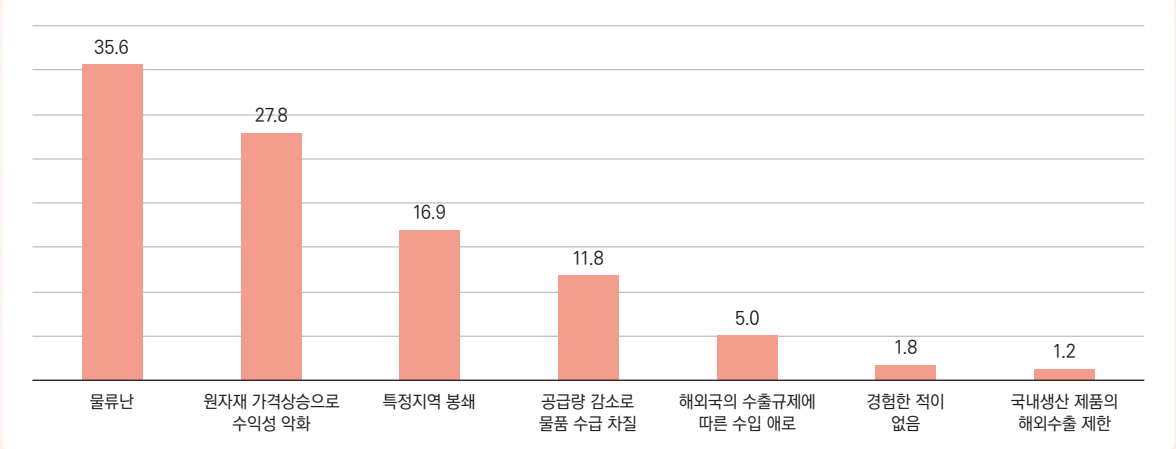


공급망(Supply Chain)이란? 국내외에서 국가 및 국민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원자재의 획득부터 소비자에게 생산물을 전달하기까지 진행되는 일련의 체계와 과정을 의미한다. 공급망은 구매, 생산, 물류 등의 경제활동들이 하나의 사슬(Chain)처럼 연결되어 있어 각각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러-우 전쟁, 화물연대 파업 등의 여파로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물류난, 원자재 가격상승 등과 같은 공급망 차질은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공급망 관련 리스크 발생 시 상황에 맞는 다양한 대응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에 힘써왔다. 2019년 일본 수출규제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마련, 2021년 요소수 사태는 「범부처 요소수 TF 구성 및 대응」 등으로 대응했다. 2022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및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 발의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공급망 기본법」을 통해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신설하고,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로 운영

국내기업 공급망 애로 경험

(단위: %)



자료: 한국무역협회(2022),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우리기업의 대응현황」 재구성

한다. 또한, 정부는 해당 법안을 통해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공급망 정책을 한곳에 모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공급망 관련 주요 재정사업

정부는 2023년에도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하여 안정적인 물류망, 공급망 등을 위한 다양한 재정사업을 진행 중이다.

스마트물류센터 조성 지원

스마트물류지센터 조성 지원사업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첨단물류시설 투자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에 115억원을 편성했다. 스마트물류센터는 저비용·고효율·안정성·친환경성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첨단물류시설 및 설비, 운영시스템 등을 도입하고 정부의 인증을 받은 물류창고를 의미한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은 「물류시설법」 제21조의4에 의거하여 기준에 부합한 물류센터를 인증하고, 행정 및 재정적 혜택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 기준은 입고, 보관, 파킹, 출고 등 물류처리 과정별 첨단 자동화 정도를 평가하는 기능영역과 물류창고의 구조적 성능, 성과관리 체계, 정보시스템 도입 수준 등을 평가하는 기반영역으로 나눠 평가한다. 택배터미널의 경우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분류작업, 상·하차 작업의 자동화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은 평가 점수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된다. 인증받은 물류센터는 건축 또는 첨단·자동화 설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정부가 최대 2%p의 이자비용을 지원한다.

스마트물류센터 조성 지원사업을 통해 스마트물류센터 이차보전도 지원하고 있는데,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또는 예비인증을 받은 물류센터 중에 물류사업 중인 곳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 자금은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나뉘어 지원된다. 시설자금은 인증 물류센터의 신축·개축 자금, 구입·승계·인수에 필요한 자금, 고도화를 위한 장비·시설·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금 등이 지원 대상이다. 운영자금의 지원 대상은 인증 물류센터를 소유 또는 운영하는 자의 경상적 활동 등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다. 지원한도는 물류센터의 연면적에 따라 다른데, 연면적이 70,000㎡ 이상인 경우 1,500억원이 대출한도이다. 35,000㎡ 이상 70,000㎡ 미만은 1,000억원, 35,000㎡ 미만은 500억원까지 지원된다. 지원금리는 기업유형에 따라 다른데 중소기업은 최대 2.00%p, 중견기업은 1.75%p, 계열대기업 등은 1.50%p의 금리가 적용된다.

소부장공급망안정 종합 지원

소부장공급망안정 종합 지원사업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2023년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16억원을 편성했다. 해당 사업은 특정국에 의존도가 높은 수입선의 다변화를 위해 편성됐다. 뿐만 아

공급망 관련 주요 재정사업 예산

(단위: 억원)

소관	관련 사업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국토교통부	스마트물류센터 조성 지원	-	-	108	127	115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공급망안정 종합 지원	-	-	-	-	16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367	369	349	631	1,754
	석유비축사업 출자	239	258	287	382	673

자료: 열린재정(2021), 「사업예산 시계열」 재구성



니라, 공급망 컨설팅 지원 및 글로벌 공급망 심층 분석 등을 통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사업은 국내외 유전개발 및 해외광물자원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23년 전년 대비 1,123억원 증액한 1,754억원이 편성되었다. 국내외 유전개발 사업은 석유·가스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해외 자원개발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액의 30% 이내에서 융자 지원된다. 해외광물자원개발 사업의 융자 지원도 유연탄, 우라늄, 철, 아연 등 해외광물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투자의 30% 이내에서 해외 자원개발기업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활성화 및 안정적 자원 확보를 지원하는데, 위험도가 높은 탐사사업을 위주로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지원사업이 실패 시 융자금을 감면하고, 성공 시 원리금 외에 특별부담금을 징수하는 등 특별융자제도를 운영한다. 융자기간은 최대 15년까지이며 조사, 개발, 생산 등 사업별, 석유, 광물 자원개발 사업별로 융자기간은 다르다. 융자심의는 「해외자원개발사업 융자심의회」를 구성해서 심의한다. 융자신청시기, 방법 등은 해외자원개발협회(www.emr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석유비축사업 출자

석유비축사업 출자는 글로벌 석유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 국내 석유수급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에 전년 대비 291억원 증액한 673억원을 편성했다. 해당 사업은 크게 △비축유 구매 △비축기지 유지보수 등으로 나뉜다. 비축유 구매 사업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근거하여 수립한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비축유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비축기지 유지보수 사업을 통해 원유기지 4개, 제품기지 4개, LPG기지 1개 등 총 9개의 석유비축시설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석유수급 위기시 비축유를 적기에 공급하여 국내 석유수급의 안정을 도모한다.



OECD 예산 저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공공재정」

김연민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kym21@kpfis.or.kr)

OECD 예산 저널(Journal on Budgeting)에는 지난 2022년 11월에 「Public finances after the COVID-19 pandemic」이 게재되었다. 해당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OECD 국가가 향후 수십 년 동안 직면하게 될 재정압박을 해결하기 위한 Marc Robinson(전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공공재정 분야 전문)의 재정정책 아이디어를 소개한다. 특히, 지출 삭감과 효율성 제고 방안(Efficiency Saving), 지출 검토(Spending Review), 예산 기획 과정에서의 지출규율(Expenditure Discipline), 그리고 지출 상한제(Expenditure Ceilings)에 대해 논의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높은 부채와 재정압박

대다수의 OECD 회원국은 코로나19 이전에도 과도한 수준의 정부 부채가 있었다. 팬데믹을 계기로 정부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15%p나 증가하여 장기적인 재정압박의 위험이 있다. 또한, 낮은 금리의 지속이 부채 수준을 더욱 높이게 되어, 공공 재정의 재정 건전성(Fiscal Sustainability)[1]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우선순위가 높은 공공 보건과 지구 온난화 관련 대응 비용 등에 대한 지출압박은 향후 10~20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았다. 더불어 총지출억제 압력은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이 이미 높고, 추가적인 세금 인상에 대한 정치적 저항이 심한 국가에서 특히 두드러질 것으로 보았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GDP의 7% 이상 정부지출이 증가할 것이며, 주로 의료, 장기 요양, 기후 변화 부분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인프라와 국방 분야에서도 지출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본 보고서는 장기적인 지출 압박의 가장 큰 요인이 의료 분야에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그 이유는 발전된 의료 기술과 더 나은 새로운 치료 기법이 지출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생명과학 기술의 발전은 오랜 세월 의료비 증가와 관련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 행위가 정밀형, 맞춤형으로 발전해갈수록 점점 더 많은 비용이 정부 예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그다음으로는 장기 요양 분야에서의 지출 압박이 클 것으로 보았다. 이는 향후 수십 년 동안 고령자·초고령자가 크게 늘어 치매 유병률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 30년 동안 큰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보았다. 대중교통, 공공건물 등으로부터 탈탄소화 방향 정책을 시행하고, 도로 등 기타 인프라에서 생기는 높은 온도 등을 해결하기 위한 지출의 규모가 클 것으로 예측했다. 더불어 자연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늘리는 것이 불가피



1 단기적으로는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하여 추가적인 국채발행 없이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것, 장기적으로는 국가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채무상환 능력이 있는 지속 가능한 재정 상태를 의미(한국재정정보원 재정 Talk Talk, 2019.8.26.).

할 것으로 보았다. 국방 분야에서의 지출은 이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유럽 국가에서 국방비는 GDP의 최소 1%가량 증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아태지역에서 국방비 투자가 적었던 국가들에서도 국방비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2. 정책 중심의 지출 삭감, 효율성 제고 방안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추가 지출이 생기는 만큼 재정 여력이 요구될 것이며, 향후 재정압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책 중심의 지출 삭감과 효율성 제고 방안이 제시되었다. 여기서 효율성 제고란, 정부가 더 적은 비용으로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나 혜택을 제공하여 기존과 동일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을 의미한다. 서비스나 혜택을 축소하거나 중단(종료)시키는 비용 절감과는 명확히 다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OECD 회원국들은 정책에 따라 이미 여러 공공 서비스 분야와 혜택에서 상당한 지출을 삭감해왔다. 또한 많은 국가가 최근 수십 년간 지출 삭감과 효율성 제고 방안 모두를 병행해왔다. 그러나 공공 인프라 유지·관리가 부적절했으며, 투자 실적도 저조하게 나타나 적절한 재정 건전화 성과로 보기 어려움을 지적했다. 특히 의료, 장기 요양, 기후 변화 관련 세금 인상과 다른 분야의 서비스 및 혜택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아, 다가올 미래에는 재정 여력을 늘리고 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출의 기준선(Baseline Expenditure)[2]에 대한 예산 재분배(Reallocation)를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예산 재분배 과정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라 지출 삭감이 필요할 수 있으며, 현 상황에서 이미 지출 삭감 정책을 실행한 국가에 대해서는 향후 지출 삭감이 제한적일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정책 중심의 지출 삭감 방법을 모색하고자 할 때는 특정 분야를 제



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모든 지출이 결국 정부 재정상태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단편적인 예로, 재량 지출에 초점을 두고 지출을 삭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효율성 제고에 큰 효과가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의료행위를 시민이 법적으로 치료받을 권리(의무 지출)가 아니라 일반적인 권리(재량 지출)로 분류하는 국가에서 재량 지출을 삭감을 목표로 두게 된다면 가장 재정압박을 크게 받는 의료 분야 예산지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더불어 사회보험성 기금의 미래 측면에서도 효율성 제고를 위해 모든 분야의 지출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회 보험성 기금은 과거부터 기금, 부담금, 세금 등으로 자금을 조달받아 왔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기금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보전을 받는 어려움에 빠졌다. 만일 추후 사회보험기금이 파산에 이르게 된다면, 정부 예산으로부터의 대규모 보전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효율성 제고 방안은 정부지출 전체를 초점에 두고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본 보고서의 의견이다. 구체적으로는, 실업급여가 매우 높은 수준(소득의 80%이상을 대체하는 수준)으로 지급되는 경우, 지급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으며, 퇴직 수당은 기대 수명의 관점에서 개혁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3. 지출 검토

본 보고서는 팬데믹 이후 지출 압박을 완화하고 예산을 관리하는 제도 중 하나로 지출 검토가 유용하게 활용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특히, 예산 재분배라는 중요한 과제 수행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았다. 고전적 의미의 지출 검토는 절감 정책 개발(Developing Savings Measures)이 주된 목표이며, 지출의 기준선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의미한다. 즉, 예산 재분배를 활용하여 새로운 우선순위에 예산을 지원하고, 총지출을 통제하기 위하여 예산 감축 대상을 분별하는 것에 초점을 맞둔 것이다.

한편, 최근 몇 년 동안 지출 검토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고전적 의미와는 조금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예를 들면, 절감 대책에 대한 방안을 찾기보다, 공공지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이용된 사례가 있었다. 이는 재정성과검토시스템을 갖춘 국가에 적용하기에 좋은 제도이나, 예산 배분을 위한 의사결정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성과 개선 조치는 정책 재설계와 사업 과정 또는 조직 구조 변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유형의 지출 검토는 실행 가능한 절감을 크게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최근에 사용되는 지출 검토의 개념은 재정 여력을 늘리고 총지출을 더욱 잘 통제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다가오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는

2 현재 정책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미래 지출을 추정하기 위한 예산 준비 과정에서의 핵심적 분석 개념(Rahim, F. S., Wendling, C. P., & Pedastsaar, E., 2022).

고전적 의미에서의 지출 검토를 재해석하여 예산 과정에서 절감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지출 검토가 장기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기능과 정치적 기능이 중요하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지출 검토의 기술적 기능은 절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정치를 제공해야 하며, 예산 결정권자가 알지 못하는 절감 가능 분야를 식별하는 것이다. 정치적 기능은 절감 정책에 대한 필요성과 장점을 국민에게 설득하여 절감 실현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4. 지출규율 준수와 수요 중심의 지출(Demand-driven Expenditure)

지출 압박의 강도가 높아지는 팬데믹 이후 시대에는 총지출에 대한 통제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에서의 정당한 추가 지출 요구에 대응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첫째, 적절한 예산 과정을 통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며, 둘째, 수요 중심의 지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함이 제안되었다.

지출규율: 예산 기획 과정과 의사결정

지출 압박 강도가 높은 상태에서의 새로운 지출은 낭비의 위험이 크다. 예를 들어,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승객 수요가 제한적인 대중교통을 확장하거나, 가계와 기업에 과도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그리고 장기적인 노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는 정부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때, 예산 기획 단계에서 적절한 의사결정을 통해 낭비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예산 기획 단계는 지출 분야에 대해 자세히 조사되어 높은 수준의 조언이 가능하고, 예산 결정권자 또는 정치적 지도자가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지출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예산 기획 단계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행정 규칙은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이미 실행되어져 오고 있다〈표〉.

〈표〉 **예산 기획 과정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 규칙**

- ☑ 사업 부서는 새로운 지출에 대한 제안서에 정확한 요구사항과 함께 자세한 사업 정보를 제출해야 함
- ☑ 중앙 기관(특히 재무부)은 모든 신규 재정지출을 검토하기 위해 잘 정립된 규칙이 있어야 함
- ☑ 신규 지출, 조세지출, 지출 투명성에 있어 보수적인 중장기적 방법론과 계획이 있어야 함
- ☑ 지출에 대한 검토와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 모든 관련 부처에 제안서를 배포해야 함
- ☑ 정치 지도부(장관/내각)의 검토 전, 최소한의 사전 통보에 대한 규칙이 시행되어야 함
- ☑ 예산 외의 새로운 지출 제안서는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함

자료: OECD(2002), 「Public finances after the COVID-19 pandemic」, p.17-18



수요 중심의 지출

수요 중심의 지출이란, 의료와 사회복지 분야와 같이 국가 차원에서 서비스와 혜택을 받는 대상자로 인해 생기는 지출을 의미한다. 앞으로 지출을 억압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요 중심의 지출은 의료와 사회복지 분야에서 혜택을 받을 사람의 수, 치료에 드는 평균 비용 등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출 관리가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어떤 혜택이 누구에게 제공되는지 명확하게 정립하는 정책(이하, 수혜자 구체화 정책, Eligibility Policy)을 통해 불확실성을 낮춰가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의료 지출에 대한 불확실성은 수혜자 구체화 정책만으로 통제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인구 고령화의 속도가 둔화되지 않는 한, 노령 연금 관련 지출은 장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으며, 의료비와 의료 기술력 확대라는 이유로 의료 분야 지출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국민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바람직한 지출이기에 의료비 지출의 증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의료 분야는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정책만으로는 지출 관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약품 가격을 협상하여 통제하거나, 고가의 장비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과잉 서비스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지출을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시의적절한 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치료의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환자 개인에게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하게끔 하거나 혜택을 기다리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현상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주의를 표했다.

정리하면, 예산을 배분하여 해당 회계 연도에 지출이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지출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우며, 지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의료와 사회복지 분야의 혜택을 받을 사람들의 수를 통제하는 정책과 함께 다른 방법들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5. 지출 상한제

의료 지출 상한제

그렇다면 앞서 논의한 것과 같이 의료비는 필수적 지출이기 때문에 제한해서는 안 되는 걸까? 의료비 상한제에 대한 고민은 1990년대 초부터 계속되어왔다. 이에 관한 대표적 사례가 있는 국가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가 있고, 뉴욕주에서도 의료 지출 상한제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제도가 있다. 이 모든 지역에서 의료비 상한제가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시의적절한 치료를 위해 의료비는 한도를 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의료 부문 전체의 상한선과 함께 하위 부문에 대해서도 상한선을 설정했다. 또한, 보건 관련 모든 사람의 수행 역할을 명확히 지정하여 의료비 상한선 제도 작동을 성공시킨 사례가 있다. 이는 굉장히 복잡한 집행 메커니즘과 모니터링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작동한 요인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급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조정하는 것에 있었다. 의료 서비스 건당 보수는 유지하면서도 예산 한도가 초과된 상황에서 제공되는 치료와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대폭 줄이는 것을 결합하여 운영했다.

이러한 유형의 시스템을 OECD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의료비 지출을 통제하기 위한 고도의 개입과 조합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비 상한제가 현실적으로 작동되기 위해 예산을 너무 낮게 설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현실적인 지출 상한선과 환급률을 설계하기 위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협의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재무부가 상한선과 환급률을 설정하기보다 보건부와 전문적 지식이 있는 기타 전문기관이 동참하여 설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복지 지출 상한제

복지 지출 상한제는 2014년 영국에서 처음 시도한 경험이 있다. 다양한 복지제도의 지출 총계 한도를 중기 재정계획에서 설정하는 제도(실업 수당 제외)이다. 복지 지출 상한제는 집행 메커니즘과 함께 진행되며, 계획과 달리 상한선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이 있다. 한편, 영국은 상한선 위반을 제재한 경우가 아직은 없기에 복지 지출 상한제가 제대로 작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상한선 위반이 정당하다는 하의원 동의 절차가 반복되고 2016년도에 상한선을 높임으로 인해 복지 상한선의 지출 계획과 결과의 의미가 흐려졌다. 즉, 정부의 약속이 신뢰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현실적 상한선 설정과 수혜자 구체화 정책을 통하여 상한선의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는 정부의 신뢰도 높은 약속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중기(中期) 부문 지출 상한제

본 보고서에서는 지출 상한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중기 부문 상한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으며, 만약 상한선이 변경돼야만 한다면 매우 제한적으로 그리고 명확한 이

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러 국가의 지출 상한제 사례는 의료비와 사회 보장 지출의 중기 부문 상한선이 앞으로 현재보다 더 높게 설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지출이 이행될 것이라면, 다른 부문에 대한 상한선은 그에 맞게 삭감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보고서의 의견이다. 즉, 의료와 사회복지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과 비용을 대비할 수 있는 제도가 구축되어야 하면서도, 준비금을 크게 설정하려면 중기 계획 단계에서 다른 부문들의 상한선을 낮게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만약, 설정된 상한선을 지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면, 정부가 이행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로 중기 부문별 상한선 설정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볼 것을 제안했다. 중기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을 포기한다고 하여 전체 상한선 제도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호주는 각 부처가 지출할 추정치를 보여주고 상한선을 정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했으며, 그 결과 지출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통제 가능한 지출 영역에 대해서만 부문 상한선을 설정하고 의료와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추정치만 설정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출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리 확보된 준비금이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수입이 늘거나 줄었을 때, 이에 상응하는 지출 상한선 변화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다만, 준비금이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다소 비현실적일 수 있음을 언급했다.

불확실한 수요 중심의 지출 관리 어려움은 예산을 책정하는 재정정책 도구로써 지출 상한제가 유용할 것으로 제언했다. 또한, 지출 상한제는 재정 건전화의 달성과 재정지속가능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다. 즉, 부채를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데 도움이 되고, 부채가 크게 상승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을 것이며, 결국에는 부채 수준이 안전한 수준에 이르도록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총지출의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점점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다만, 상한선 적용 범위는 실업 수당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포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주요 의견이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한 국가결산

곽이정 재정시스템운영본부 차장(yjkwak@kpfis.or.kr)



1. 국가결산의 의의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국가결산은 국가재정의 운용실적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정리·기록한 것으로 국가의 재정운용 결과 및 재정상태, 재정운영 성과를 결산주체별로 일정한 형식에 따라 체계적으로 작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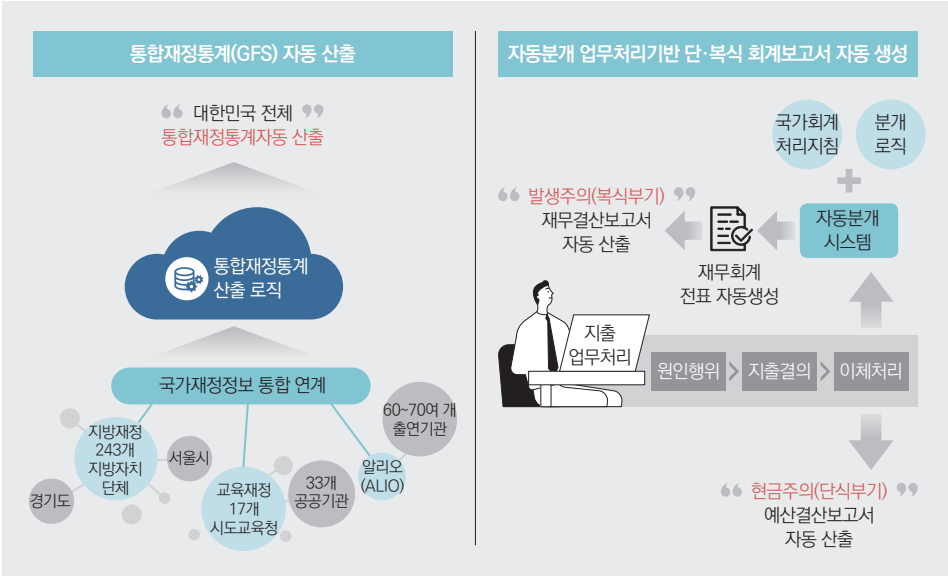
이러한 국가결산의 의미는 1) 결산보고서 작성으로 알기 쉬운 재정정보의 제공, 2) 재정정보로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 및 심의과정에 반영, 3) 사후적인 국회의 시정요구나 감사원 감사에 따른 지출책임 부담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결산은 예산처럼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성립하여 정부의 재정활동을 규율하는 규범성은 없고, 국회의 의결로 성립한 예산을 재정법과 예산법에 따라 집행한 실적을 국회에 사후 보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산이 '계획' 내지 '예측'이라면, 결산은 '실적'이다.

국가결산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1]을 통하여 업무 순기에 따라 수행되고 있다. 업무담당자는 단식부기 기반의 지출 등 업무처리를 하면 dBrain+은 자동분개시스템을 통하여 예산결산(현금주의·단식부기)과 재무결산(발생주의·복식부기) 보고서를 자동산출한다. 또한,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을 통합연계하여 국가 전체의 통합재정통계(GFS)를 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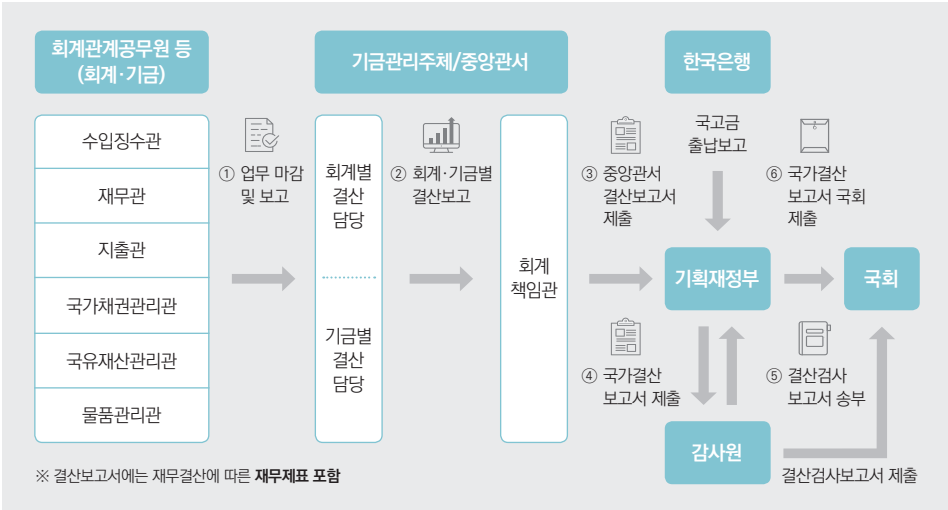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국가재정법 제97조의 2(재정업무의 정보화)에 의하여 국가재정에 관한 전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시스템으로 한국재정정보원(FIS)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

〈그림 1〉 **dBrain+ 회계결산시스템 주요 기능**



2. 국가결산 과정과 한국재정정보원의 국가결산 지원

〈그림 2〉 **국가결산 과정**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 결산작성 지침

국가결산은 회계관리공무원, 기금관리주체/중앙관서,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등 다양한 주체들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세부적인 진행 과정과 그에 따른 재정정보원의 업무 지원 내용과 지원 일정은 다음과 같다.

국가결산 세부 진행 및 업무 지원 내용

❶ 업무 마감 및 보고(회계관계 공무원 등 → 회계·기금별 결산부서)

주체	내용
회계관계 공무원[2] 등	• 당해 회계연도의 업무를 마감하고 결산을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소관 중앙관서 회계·기금별 결산담당 부서에 보고
재정정보원	• 관서별 회계계정별 마감 처리 현황 점검 – 오처리, 미처리, 미마감 유형별 처리방법 안내 및 처리 독려

❷ 회계기금별 결산보고(회계·기금별 결산부서 → 중앙관서 회계책임관)

주체	내용
회계·기금별 결산부서	• 회계·기금별 결산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 회계책임관에게 보고
재정정보원	• 중앙관서별 마감처리 지원 – 최종마감을 위한 결산진행 현황 모니터링 – 결산 단계별 데이터 정합성 점검

❸ 중앙관서 결산보고서 제출(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주체	내용
중앙관서의 장	• 결산 개요, 세입세출(수입지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로 이루어진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
중앙관서 결산총괄부서	• 소관 회계·기금의 세입세출(수입지출)결산을 통합하여 중앙관서의 세입세출(수입지출)결산을 작성 • 소관 회계·기금별 재무제표를 통합하고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제거, 원가계산을 통해 중앙관서 재무제표를 작성 •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 결과를 토대로 결산 개요를 작성하고, 소관 회계·기금의 성과보고서를 작성
재정정보원	• 중앙관서별 결산보고서 산출 지원 및 정합성 검증 – 회계·기금·중앙관서 결산보고서 점검

❹ 국가결산보고서 제출(기획재정부 → 감사원)

주체	내용
기획재정부장관	•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
재정정보원	• 감사원 결산감사를 위한 결산자료 산출 및 제공 • 감사원 제출을 위한 국가결산보고서 출력물 점검

2 회계관계 공무원은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임명된 공무원으로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국가채권관리관, 물품관리관, 출납공무원 등을 말함.

❺ 결산검사보고서 송부(감사원 → 기획재정부)

주체	내용
감사원	•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
재정정보원	• 결산검사 반영을 위한 조치 지원(중앙관서 및 회계·기금)

❻ 국가결산보고서 국회제출(기획재정부 → 국회)

주체	내용
정부	• 감사원 결산검사 결과를 반영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함
재정정보원	• 국회 제출을 위한 최종 국가결산보고서 점검

* 국회의 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국회법 제84조)

dBrain+ 국가결산 지원 일정(2021년 기준)

(N) 회계연도

<table>
<tr><th>7월</th><th>8월</th><th>9월</th><th>10월</th><th>11월</th><th>12월</th></tr>
<tr><td colspan="6">결산 기능개선 TF 운영(월 1회 정기회의, 12월 최종보고회) →</td></tr>
<tr><td rowspan="3"></td><td rowspan="3"></td><td>▸재무결산
중간점검지침 작성</td><td>▸재무결산
중간점검</td><td>▸연계기관
결산지침 작성,
배포</td><td>← 총세입·총세출
마감</td></tr>
<tr><td colspan="4">← 결산 작성 지침 개정 지원 →</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 결산TF 운영</td></tr>
<tr><td colspan="2">← 결산FAQ 책자 발간, 배포 →</td><td colspan="2">← 일선관서 마감 / 회계·기금,
중앙관서, 성인지 결산교육 →</td></tr>
</table>

(N+1) 회계연도

<table>
<tr><th>1월</th><th>2월</th><th>3월</th><th>4월</th><th>5월</th><th>6월</th></tr>
<tr><td>▸성인지결산
교육</td><td>▸총세입부·
총세출부
마감 행사(2/10)</td><td>▸국가통합 결산
(3/31)</td><td>▸감사원 결산 검사
반영(4/30)</td><td>▸국가통합 결산
개요(통계편)
작성(5/20)</td><td rowspan="2">← 결산 기능개선
TF 운영
(월 1회, 12월
최종보고회)</td></tr>
<tr><td>▸총세입·총세출
마감</td><td>▸회계·기금,
중앙관서
확정(2/28)</td><td>▸감사원
결산검사</td><td></td><td>▸국가결산 보고서
국회 제출(5/31)</td></tr>
<tr><td rowspan="2">결산TF 운영 →</td><td rowspan="2"></td><td rowspan="2">▸중앙관서 결산
개요(통계편)
작성(3/31)</td><td colspan="3">← 국회(예결위) / 감사원 결산자료 제공 →</td></tr>
<tr><td></td><td></td><td>▸열린재정,
재정통계 반영</td></tr>
</table>

한국재정정보원은 dBrain+를 통하여 위와 같이 국가결산을 수행함으로써 2021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약 4만건의 마감처리 및 279건의 결산보고서 작성을 지원하였다.

〈표〉 **2021회계연도 업무별 국가결산 마감 현황**

(단위: 관서 수, 2월 말 기준)

구분	합계	수입	지출	예산	국유재산	물품	채권	채무
합계	40,592	5,196	14,590	6,424	4,525	4,350	5,477	30
일선관서	38,846	4,878	14,282*	6,133	4,273	4,123	5,157	-
회계·계정	1,381	260	250	231	193	168	260	19
중앙관서	365	58	58	60	59	59	60	11

* 지출관(5,419) +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8,863)

3. 국가결산 대상 중앙관서 회계 및 기금 현황

2022년 9월 말 기준으로 국가결산대상 중앙관서는 61개, 일반회계 60개, 기타특별회계는 15개[3], 기업특별회계는 17개[4], 기금은 68개이다. 기금 중 직전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규모가 5천억원 이상인 12개 기금은 감사보고서를 첨부해야[5] 한다.

감사보고서 대상 12개 기금(2022년 기준)

- 공무원연금기금
- 국민체육진흥기금
- 기술보증기금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무역보험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 한강수계관리기금

※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 결산작성 지침

4. 향후 발전 방향 - '국민중심' 국가결산체계 개편

정부는 그간 10년 넘게 운영되던 국가결산체계를 전면 개편해 국민이 더욱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결산개요·세입세출결산·재무제표·성과보고서 등 4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 국가결산보고서를 개편하여, 1) 국민이 쉽게 이해하는 국민중심 결산서 제공, 2) 재무제표 기반 결산 분석

3 일부 특별회계로 교통시설특별회계(2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21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7개),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10개) 등 여러 중앙관서에서 걸쳐 존재.

4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는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국립재활원, 국립건강센터 등 13개 존재.

5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기능 확대, 3) 국제 흐름에 부합하는 결산서를 구성하여 '국가결산의 활용도'를 높혀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국재정정보원도 국가결산체계 개편에 발맞추어 관련 시스템 추가 구축·변경 지원, 결산 데이터 정비 등 IT 환경 및 인프라를 제공할 예정*이다.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2.12.9.

여기서 잠깐,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행사란?

회계관계공무원 및 각 중앙관서의 장부마감 및 보고서 제출이 완료되면 국가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 2월 10일에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을 한다.

- 총세입·총세출부는 한 회계연도 국가의 세입·세출 출납사항 일체를 회계별, 소관별, 계정과목별 및 집행 월별로 구분·정리하여 기록한 정부의 회계장부이다.
- 총세입·세출부의 마감은 한 회계연도 동안의 세입세출에 관한 출납사무를 완결하고, 정부 전체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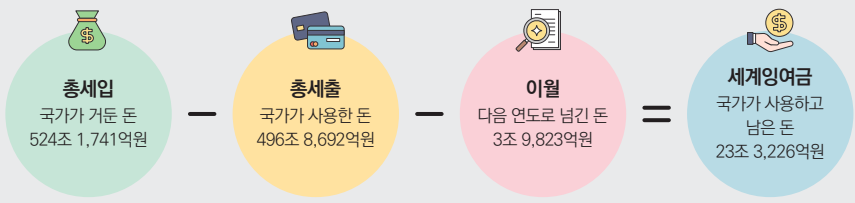
총세입·세출부는 수입징수관, 재무관 및 지출관으로부터 수입징수보고서와 지출원인행위액 및 지출액보고서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예산 관계자료를 기획재정부가 제출받아 이를 연도별·회계별·소관별·계정과목별 및 집행 월별로 구분·집계하여 마감*한다.

*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권자는 기획재정부장관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의 효과는 매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종료함으로써 국가의 세입세출액 및 세계잉여금이 확정된다.

〈그림 3〉 **2021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결산 결과**

(단위: 조원)



구분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결산상잉여금 (C=A−B)	이월액 (D)	세계잉여금 (E=C−D)
일반회계	438.4	417.7	20.6	2.6	18.0
특별회계	85.8	79.1	6.7	1.3	5.3
합계	524.2	496.9	27.3	4.0	23.3

※ 자료: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재정의 힘으로 육군을 강하게 하는

육군본부 예산차장실

Interview
안상욱 육군본부 예산차장



대한민국 육군의 전력운영유지 분야 살림살이를 담당하는 육군본부 예산차장실.
예산차장실은 육군의 전력운영비를 어떻게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을까? 안상욱 육군본부 예산차장을 만나
재정의 힘으로 육군의 미래 기반을 든든하게 다지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봤다.

글. **정재림** 사진. **조병우**

육군 전력운영비를 담당하는 예산차장실

육군 예산차장실은 전력운영유지 분야에 대한 살림살이를 담당한다. 10명 내외로 이루어진 총 5개의 과에서 예산의 편성부터 쓰임까지 각기 업무를 분장하여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먼저 재정회계과에서는 예산·회계 분야의 조직 및 제도 정비, 장병 금융경제교육, 국가회계 신뢰성 유지 및 결산을 담당하고 있다. 중기계획과에서는 5개년 중기계획의 수립 및 재원 획득을 담당한다. 예산편성과에서는 연도별 예산의 편성과 획득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예산운영과는 당해 연도 예산에 대한 집행과 결산 등 예산운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끝으로 재정지원과는 육군본부 사업예산에 대한 계약 등의 집행 지원과 육군 전 부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금에 대한 공급 업무를 수행한다.

"재정회계과 등 5개과는 10여 명씩 구성되어 50여 명의 인원이 예산차장실에서 전력운영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안상욱 육군본부 예산차장은 재정병과 병과장을 겸직하며 육군 예산을 총괄하고 있다. 안상욱 차장에게 육군본부 예산차장실이 담당하는 육군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다.

"육군본부 예산차장실에서는 군사력 건설과 관련된 방위력개선비를 제외하고, 육군의 군사력 유지에 필요한 전력운영비에 대하여 예산편성 및 획득, 집행 및 결산 업무를 담당합니다."

국방예산은 크게 방위력개선비와 전력운영비로 구분된다. 2022년 기준 국방예산은 54.6조원으로 그중 방위력개선비는 16.7조원(30.6%), 전력운영비는 37.9조원(69.4%)이었다. 이 중 육군의 예산 규모는 24.3조원(국방예산의 44.6%)이다. 육군은 이러한 예산을 방위력개선비에 5.4조원(22.1%), 전력운영비에 18.9조원(77.9%)으로 편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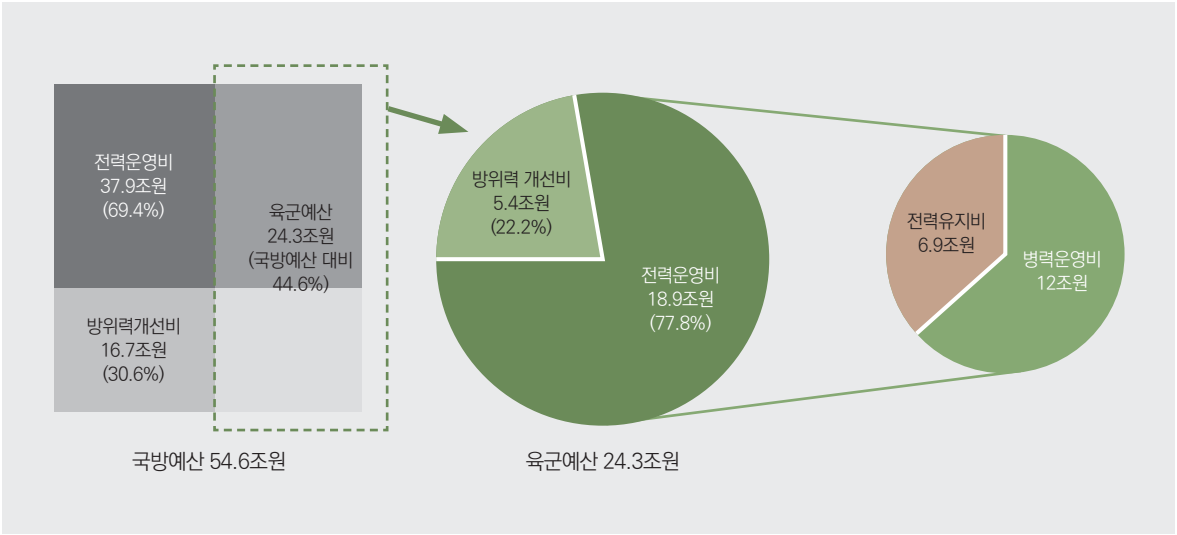
"육군의 전력운영비 예산인 18.9조원은 국방부 전력운영비 예산의 약 5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전력운영비의 주요 부문은 다시 병력운영비와 전력유지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병력운영 분야의 예산 프로그램은 급여정책과 급식 및 피복이며, 전력유지 분야 예산 프로그램은 국방정보화, 군수 지원 및 협력, 군 인사 및 교육훈련,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예비전력운영, 국방행정 지원 등으로 총 10개의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구성된다.

"이러한 기준으로 육군의 전력운영비를 살펴보면 18.9조원 중에서 병력운영에 사용되는 예산은 12조원(63.5%)이며, 전력유지에 사용되는 예산은 6.9조원(36.5%)입니다."

육군은 육해공군 병력 중 병력의 규모가 가장 많다. 이에 따라 병력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022년 국방분야 예산 중 육군 예산 구성**



2023년도 전력운영비 예산의 편성

그렇다면 육군의 2023년도 예산은 어떤 모습일까? 안상욱 차장에게 2023년도 예산에 대해 들었다.

육군은 지난해 2월 말 전력운영비 육군예산 요구안을 확정하여 국방부에 제출하였고, 국방부 및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거쳐 전년 대비 6.0% 증가된 20조 871억원을 지난 12월 국회 의결을 통해 확정하였다.

안상욱 차장은 예산안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좋은 정책도 이루어질 수 없기에 필요한 예산편성을 위해 2022년 한 해 동안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다고 전했다.

"육군 지휘관과 관리자들은 '정책이 곧 예산이고, 예산이 곧 정책이다'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정책 및 사업 결정 시에 필요한 법령 및 제도와 예산 등이 준비되었는지 우선 정책회의 등 의사결정체를 통해 확인하고 결정합니다."

결정된 정책 사업에 대해 적정 소요의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는 실무 및 기능 심의체를 통해 먼저 검증한다. 이후 상급기관으로 소요를 제기한 후, 육군본부 내 해당 구성원들의 협업체계를 통해 국방부, 기재부, 국회 등 심의기관을 대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한 설명과 획득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많은 노고를 통해 반영된 예산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 물었다.

"육군예산을 편성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집행하기 위해 예산운영과에서는 매년 연간 사업계획과 연계한 세출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적시 적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훈련 또 훈련하는 육군', '미래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육군', '국민에게 사랑받는 육군'을 구현하기 위해 가려낸 핵심적인 사업들을 중점관리 사업으로 선정하고 연초부터 평가회를 거쳐 꼼꼼히 살핀 후 집행점검관리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예산결산 심사 등 각종 감사에 대비하여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면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훈련 또 훈련하는 육군,
> 미래전시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육군,
> 국민에게 사랑받는 육군을
> 구현하기 위해 적시 적소에 예산을
>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최근 재정집행 기조는 서민 생활 안정과 고물가·고환율로 인한 경기 위축을 방어하고 경기 회복세를 견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육군에서도 이러한 정책 기조에 맞춰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노력합니다. 주기적으로 집행점검 회의를 실시하고,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하고 있으며, 집행기관(방위사업청, 조달청 등)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집행환경을 고려한 사업 관리를 통해 재정집행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률 96.6%를 달성하였다. 이는 모두 국민의 혈세 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사명감에서 비롯되었다.

미래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강하고 자랑스러운 육군으로 변화와 혁신

육군은 국토방위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기 위해 2005년부터 국방개혁을 통해 병력집약형 군에서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기술집약형 군으로 탈바꿈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방혁신 4.0과 연계한 주요 정책을 추진 중이다. AI 사격훈련지원체계를 통해 VR·AR 기술을 적용한 가상환경에서 훈련하고, 과학화 훈련장 구축으로 실기동과 실사격이 가능한 실전적, 과학적 훈련 여건을 조성하는 등 당장 오늘밤에 생기는 유사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능형 스마트부대를 확대해 모든 전투플랫폼(인원, 장비, 시설)을 자동·원격·지능화하여 장병의 전투력을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부대환경을 조성하고, 무선 LAN과 해안경계체계 통제장비 구축 등 지능형 유·무인복합전투체계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더불어 '더 좋은 병영식당' 사업을 통해 군 병영식당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병영생활관을 2~4인실로 개선하여 장병이 만족할 수 있는 미래 병영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방위력개선비로 눈에 보이는 유형전력을 증강하여 현존전력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무형전력에 투입되는 전력운영비입니다. 훈련시설 구축과 복지·인권 구현을 위한 주거·급식·복지시설을 보장하여 우리 군이 국토방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유형, 무형전력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균형적으로 극대화될 때 그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방예산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선결 조건입니다. 앞으로도 재원 확대와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노력할 예정이오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의 대변신,

미리 떠나는 친환경 산책길

고속도로가 공원이 된다! 교통난 심각한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되고, 지상부는 시민을 위한 녹지와 문화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친환경 복합문화공원으로 대변신할 경부고속도로 주변을 따라 산책하기 좋은 숲과 공원을 둘러보았다. 도심 속 휴식을 누릴 수 있는 탄소중립 산책로를 걸어보자.

글. **송지유** 사진. **조병우**



상습 정체 경부고속도로, 지하도로 재편 추진

상습적 교통지·정체, 혼잡으로 인해 불편을 겪던 경부고속도로는 교통난 해소, 도로용량 확장을 위해 지하화 사업을 계획했다.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는 현재 '한남IC-양재IC', '양재IC-화성' 두 가지 구역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한남IC부터 양재IC는 현재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구간으로 상습 정체 구역인 약 6.8km 구간에 지하터널을 뚫어 고속도로를 만들고 지상에 있던 차로를 줄여 보행자 도로와 함께 녹지를 만드는 계획이 진행 중이다. 현재 총 8차선인 고속도로를 지하로 옮기고, 도로 가운데는 공원 그리고 양옆은 지역 생활 차량 도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왕복 12차선 도로가 건설되면 만성적인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 해당 사업은 2022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진행 후, 2023년에 일대 공간개선 기본구상 용역을 거쳐 2024년 이후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양재IC-화성 구간은 앞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달리 기존 지상도로는 그대로 두고 지하에 추가 도로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다. 기존 지상도로에는 버스전용차로를 확대하여 고속도로의 대중교통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업 규모를 3조 2,051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올해 초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2027년까지 설계를 마친다는 계획 하에 추진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되면 교통난 해소 외에도 여가-문화 복합공간, 지역 편의시설의 확대가 기대된다. 앞으로 더 많이 자리잡게 될 고속도로 주변 녹지공원의 모습은 어떨지를 상상해볼 수 있는 매헌시민의 숲과 길마중길 일대로 떠나보자.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 동상

>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실행되면,
> 지상에는 공원 및 친환경 녹지를 비롯해
> 여가·문화복합공간 및
> 지역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 복합개발사업이 진행된다."

산책하기 좋은 매헌시민의 숲

매섭도록 차가운 공기 속으로 발을 내딛자 청정한 숲이 맞아준다. 며칠 전 내린 눈이 소복이 쌓인 채 얼어 있는 양재 매헌시민의 숲. 고즈넉한 숲길 따라 내딛는 걸음마다 얼어붙은 눈길이 사박사박 부서지는 소리가 상쾌하게 다가온다. 눈 쌓인 숲속, 잎을 모두 떨어뜨린 나무들 아래에서는 청설모들이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먹이를 모으고 있다.

오랫동안 '양재시민의 숲'으로 불려왔던 이곳은 지난해 '매헌시민의 숲'으로 이름이 변경됐다. 우리나라 최초로 숲 개념을 도입한 공원답게 소나무, 느티나무, 당단풍, 칠엽수, 잣나무, 메타세쿼이아 등 다양한 수목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매헌시민의 숲 북측에는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과 자연학습장, 야외공연장 등도 있다. 곳곳에 출몰하는 청설모들과 숨바꼭질하듯 숲길을 걷다 보니 어느덧 양재천 제방 산책로를 따라 매헌교에 다다른다.



길마중길

도시경쟁력 up, 친환경 녹색 도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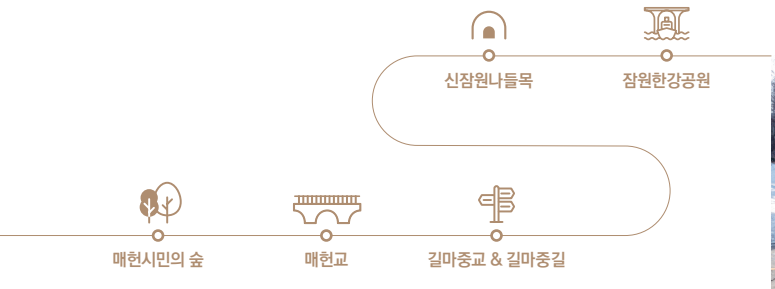
매헌교에서부터는 경부고속도로 옆으로 방음벽 펜스가 높이 설치된 길이 이어진다. 이곳은 새벽 시간을 제외하고는 늘 극심한 교통체증이 이루어지는 상습지·정체구간이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실행되면, 지상에는 공원 및 친환경 녹지를 비롯해 여가·문화복합공간 및 지역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교통정체 해결은 물론,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동서로 단절됐던 인근 지역도 도로가 거대한 공원으로 바뀌면서 하나로 연결되므로 지역단절 문제까지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지역 생활 차량 도로 옆에는 시민들의 보행로, 자전거 도로 등을 만들 예정이므로, 차량 통행만 이뤄졌던 현재의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서울의 동·서간 도보 및 자전거 이동도 가능해질 것이다.

특히 인근 지역은 풍부한 녹지 확보·생태 면적 확대·대기오염 저감·바람길 확보 등을 통하여 도로에서 나오는 소음이나 매연 등 부작용에서 벗어나게 된다.

도심 숲과 한강공원 산책까지 친환경 힐링 여행

친환경 공원과 문화 공간에서 여가를 즐기는 모습을 상상하며, 매헌교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코스를 따라 산책 여행을 떠나 본다. 산책길은 '매헌시민의 숲'부터 '길마중길'을 지나 '한강' 신잠원나들목까지 이어진다. 매헌교에서부터 펜스를 따라 도로변으로 서초 나들목까지 2km 가량 걷다가 '길마중길'로 들어선다.

길마중길은 한남 나들목에서 서초 나들목까지 경부고속도로변 공간을 활용하며 만든 녹지공원 겸 보행자로이다. 서초구에서 한강시민공원 잠원지구에서 청계산까지 이어지는 녹색길 구간이기도 한 길마중길은 경부고속도로 방음벽 펜스 옆 녹지를 따라 산책로가 이어진다. 키 큰 나무인 상록수, 소나무들이 울창한 숲길을 걷노라니 청정한 피톤치드로 가득한 느낌이다. 반포IC에서 길마중교를 지나 조금 더 걸으면 하늘을 가릴 듯 높이 솟





신잠원나들목



잠원한강공원

은 메타세쿼이아가 빼곡히 늘어선 오솔길을 만난다. 서울 도심이 아니라 마치 깊은 산속에 온 듯 메타세쿼이아길의 운치를 만끽하는 즐거움에 매서운 날씨조차 잊게 된다.

길마중교에서 나루터로를 따라 신잠원나들목 지하보도를 통과하면, 눈앞에 바로 푸른 한강이 펼쳐진다. 잠원지구 한강시민공원이다. 잠원지구는 영동대교에서 동호대교와 한남대교를 지나 반포대교 사이 한강 남단에 위치해 있다. 축구장, 농구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비롯해, 5.4km 길이의 자전거도로가 뻗어 있어 한강의 경관을 즐기며 자전거 여행을 즐기기도 좋다.

눈썰매장으로 변한 수영장에서는 혹한 속에서도 환한 웃음을 가득 머금은 아이들과 동심의 천국이 하얀 설원 위에 펼쳐져 있다. 강변에 연결된 2동의 수상 건물에서는 여름철 윈드서핑, 모터보트 등 수상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으며, 레스토랑과 카페에서는 눈높이에 바로 일렁이는 한강을 보며 하염없이 물멍을 즐기기도 좋다. 특히 한강 위 갤러리인 서울웨이브 아트센터는 서울과 한강의 아름다움과 예술문화를 알려나가는 전시 공간으로 재미있고 신선한 전시 콘텐츠를 만날 수 있다.

강 건너편으로 서울N타워가 솟아 있는 한강뷰도 아름답지만, 강변을 따라 넓게 펼쳐진 갈대밭은 빼놓을 수 없는 절경이다. 노을이 질 무렵, 바람에 흐드러지는 갈대밭이 한강과 함께 붉게 물드는 풍경이 낭만의 정점을 찍는다. 비행을 마치고 내려앉은 물오리떼들과 함께 유유히 흐르는 한강을 뒤로하며 산책을 마무리한다. 지나온 산책로를 돌아보니, 도로변의 펜스들이 모두 걷히고 여유롭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과 차들이 막힘없이 달리는 경부고속도로의 풍경화가 벌써부터 다채롭게 채색되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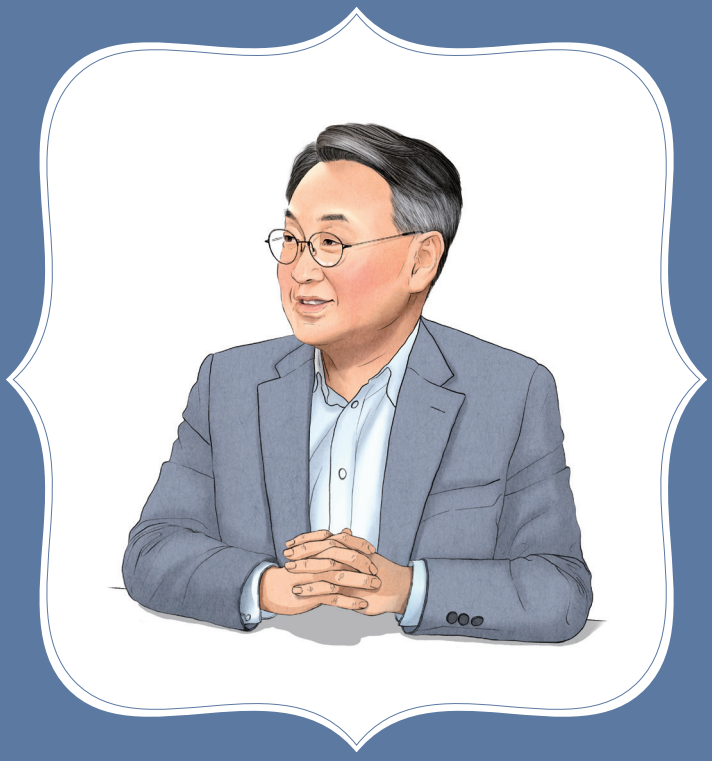
Tip

매헌시민의 숲 서울시 서초구 매헌로 99/ 02-575-3895
길마중길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40길(나루터로8길)
잠원한강공원 서울시 서초구 잠원로 221-124/ 02-3780-0531~3

공공부문 재정건전화 노력과 유특회계의 탄생

- 유일호 전 부총리 인터뷰 ❶

장윤정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



[편집자 주]

<나라재정>은 2023년도 신년 기획으로 '한국 재정사의 현장' 연재를 시작합니다. 경제·재정정책 현장의 주역을 담당했던 주인공들을 만나 재정의 현재 모습을 결정지은 제도 변천과 의사결정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보고,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후배들에게 당부하고자 하시는 말씀도 전합니다.

첫 손님으로는 2016년부터 2017년 중반까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하셨던 유일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유 교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이번 달부터 3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겨울답게 매서운 추위가 성큼 다가온 12월의 어느 날, 반가운 얼굴이 재정정보원을 찾았다. 제3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교수이다.

유일호 전 부총리(이하 유 부총리)는 2008년도 국회의원 당선부터 2017년도에 이임하기까지 10년을 정계와 공직에 있으면서 경제·재정정책 현장에 종사한 바 있다. 재정정보원과는 2016년 당시 부총리이자 소관부처 장관으로서 재정정보원 개원식을 함께한 귀한 인연이 있다. 또한 유 부총리는 정치에 입문하기 오래전부터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등을 두루 역임하면서 정책 개발과 평가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아 온 연구자이자 학자이기도 하다.

"처음 재정정책에 몸담아 정책협의회에 참여하게 되었던 1989년만 해도 재정수지 흑자가 매년 계속되던 상황이었어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흑자 때문에 여론으로부터 세수추계가 혹시 의도적으로 보수적인 것은 아니냐는 의심과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죠. 그러다 1997~1998년 IMF 위기로 정부가 할 일이 많아지게 된 이후로부터 재정적자가 고착화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규모는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계속 커지게 되었네요."

유 부총리의 기억은 이처럼 80년대부터 현재까지, 재정사의 최근 30년 이상을 망라한다. 오늘의 화제를 위해 그에게 손을 거쳐간 정책이나 제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꼽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그가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정책이 아닌, 같



이 일한 사람들이었다.

"제가 혼자 해낸 건 없어요. 다 같이 한 것이지. 다른 분들이 그리고 타 부처에서 협업한 것이 제가 있을 때 시행되기 시작한 것뿐입니다."

이어서 그는 예산 제도 중에서는 전자정부시스템 도입과, 아직까지 완전한 이행은 되지 않고 있긴 하지만 정부회계를 복식부기 체제로 전환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예산을 데이터로서 보고 이를 축적하여 분석에 이용하기 위한 제도로서 첫 걸음을 떼었다는 의미에서다.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국가 예산을 결정하고, 향후 정책결정에 반영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회상했다.

다음으로는 공공부문 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공공부문 부채 파악과 감축 계획 수립을 꼽았다. 특히 당시 국회 내에서는 공공기관의 부채를 모두 국가부채에 포함하여 단일 수치로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당시 유 의원의 생각은 달랐다.

"공공부문의 부채는 중요하고, 다 카운트해야 하는 것이 맞죠. 그렇지만 하나로 뭉쳐서 보는 것에

〈표〉 **2021년 국가채무 및 부채 통계**

	국가채무(D1)	일반정부부채(D2)	공공부문부채(D3)
포괄범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D1+국민연금공단 등 비영리 공공기관(342개)	D2+한국전력 등 비금융 공공기관(158개)
금액(조원)	970.7조원	1,066.2조원	1,427.3조원
GDP 대비(%)	46.9%	51.5%	68.9%

자료: 기획재정부

> 교육재정교부금 자체는
> 분명히 좋은 의미와
> 취지가 있는 제도이죠.
> 하지만 최근에 개편 논의가 되고
> 화제에 오르게 되는 것을 보니,
> 당시의 결정에 다시금
>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떤 실익이 있을까? 달리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별도로 봐야 한다는 게 저의 입장이었습니다. 또 연금제도와 여기서 나오는 부채, 수지도 중요하고, 미리 걱정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아직까지 흑자를 내고 있으니 따로 떼어서 보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고 주장한 거지요. 이 점은 의미 있었다고 봅니다."

그의 말대로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통계는 D1, D2, D3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발표 및 관리되고 있다. D1은 국가채무, D2는 일반정부 부채로 D1에 국민연금공단 등의 비영리 공공기관(342개) 부채를 합산한 것이다. D3은 공공부문 부채로 불리며 D2에 더하여 한국전력 등의 비금융 공공기관(158개) 부채까지 포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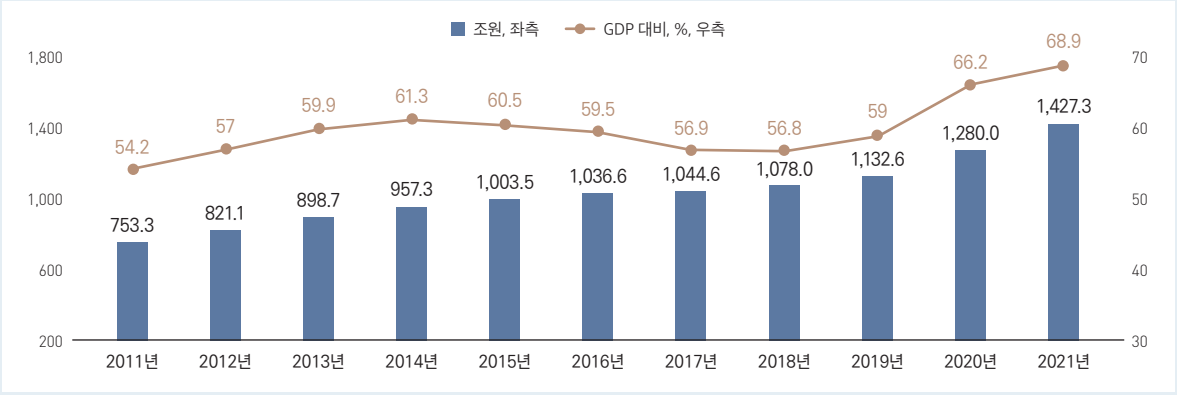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4대강 사업 등 정부 추진 사업을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급증하여 재무건전성 문제가 심각하게 떠오른 시기가 있다.

"요즈음도 공공기관 혁신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2013년 당시에도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위한 혁신이 화두가 된 적이 있어요. 과도한 부채를 방만경영의 개선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에서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부상한 주요 쟁점은 자산매각과 노조개혁이었습니다. 첨예한 대립이 빚어질 만한 문제였죠. 그렇지만 이후 힘들게 이어진 개혁의 결과는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해는 실제 공공기관 부채가 감소하기도 했으니까요. 이후로 공공기관 부채는 상당 기간 증가를 멈추는 추세를 보입니다."

실제 2011년 이후 공공부문 부채 데이터를 보면 (그림 참조) GDP 대비 비율은 2014년 이후 2017



〈그림〉 2012~2020년 공공부문 부채 추이



년까지 지속 감소했고 이 수준이 2018년까지 이어졌다. 이 기간의 부채 총액 증가폭도 957.3조원에서 1,044.6조로 87.3조원에 그치고 있다. 유 부총리는 공공기관 부채 감축은 박근혜 정부의 세 장관들이 일관되게 추구해왔던 목표였다고 회상했다.

기억에 남는 것은 빛나는 것이기 마련이지만, 그를 거쳐간 모든 정책과 결정이 만족스럽기만 할 수는 없었을 터였다. 그렇다면 혹시 다시 돌아가고 싶을 만큼 아쉬움이 남는 순간도 있을까? 조심스러울 수 있는 질문이지만 용기를 내어 물었다. 그는 잠시 생각을 가다듬다가, 좀 전보다는 다소 가라앉은 어조로 답했다.

"정책적 결정 차원에서, 2017년 예산 통과 시 교육재정교부금과 별도로 유보통합예산의 절반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교육재정교부금 자체는 분명히 좋은 의미와 취지가 있는 제도이죠. 하지만 최근에 개편 논의가 되고 화제에 오르게 되는 것을 보니, 당시의 결정에 다시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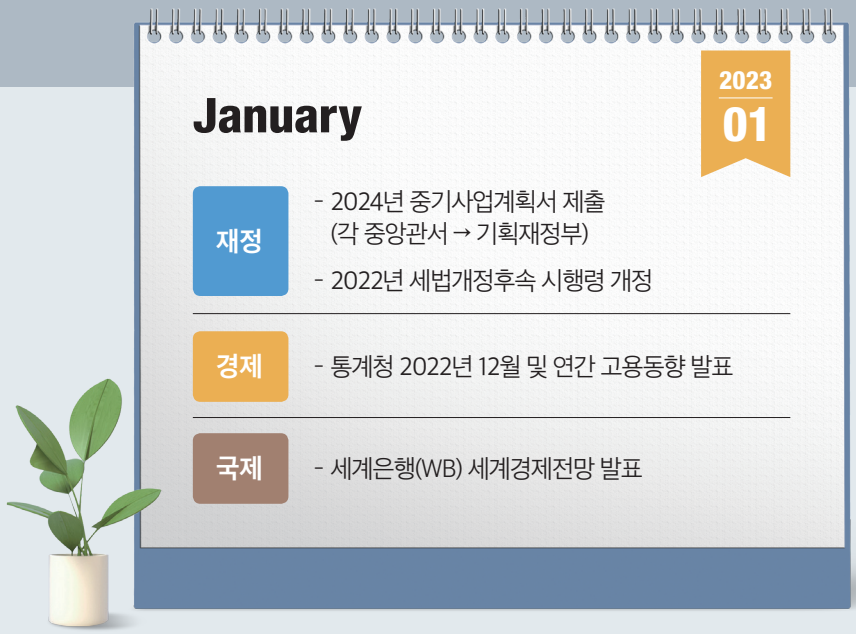
유보통합예산이란 만 3~5세 대상의 유치원 교육과 어린이집의 보육을 통합하기로 하면서 필요하게 된 예산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해당 연령 대 아동이 기관에 다니는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돌봄 위주의 보육을 중심 기능으로 해 온 어린이집에서도 2013년부터는 만 3~5세 어린이에게 유치원과 동일한 교육과정(누리과정)을 가르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서는 교사 인건비, 교재비 등의 교육과정 운영비가 필요하게 되었고, 어떤 예산으로 이러한 비용을 충당할 것인지가 매년 예산시마다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별도 추가 교부예산 없이 기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에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을 펼친 교육계와 번번이 갈등을 빚었다. 결국 3년 한시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지방교육교부금 재원이던 교육세 일부와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아 해당 예산을 충당하게 되었다. 2017년 본예산을 통해 중앙정부 재원에서 추가로 지출하게 된 금액은 8,600억원 규모였으며, 2022년 현재까지 2.1조원 규모로 증가했다.

아쉬움이란 꼬리에 꼬리를 물기 마련인지, 이후로 유 부총리는 작은 것부터 굵직한 것까지 몇 가지의 기억을 덧붙였다.

▶▶ 다음 호에서 계속 ▶▶

Fiscal **Calendar**



2023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기획재정부, 12.21.)

- (평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민간·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체질개선 가속화 필요
- (향후 경제여건 점검) 글로벌 경기위축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국내 실물경제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민생 어려움 가중 우려
- (2023년 전망) 경제성장률 둔화(2.5→1.6%), 취업자 증가폭 축소, 물가 오름세 둔화(5.1→3.5%), 경상수지 둔화(220→210억불)

<2023년 경제정책 방향>

① (거시경제 안정 관리) 선제적 리스크 관리, 적시 정책대응 등으로 위기극복 기반 마련

② (민생경제 회복 지원) 물가·생계비 부담은 낮추고, 일자리와 안전망은 확대

③ (민간중심 활력 제고) 수출·투자 활성화 지원, 신성장 4.0 전략 추진 등으로 민간활력 제고

④ (미래 대비 체질 개선) 3대 구조개혁, 3대 경제혁신을 가속화하고 인구·기후위기, 공급망 재편 등 미래 대비 강화

2023년 예산, 국회 확정·의결 (기획재정부, 12.23.)

- 총지출 639.0→638.7조원(정부안 대비 0.3조원 순감)
-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58.2%로 정부안 수준, 국가채무는 1,134.4조원(정부안 대비 0.4조원 축소)으로 건전재정 기조 견지
- 주요 증액 분야
  - (서민·취약계층 지원)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 및 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위해 +1.7조원 증액
  - (미래·안보투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 반도체 산업 투자, 3축 체계관련 전력 증강,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 투자 등 미래 대비 및 안보·안전 투자에 +0.7조원 보강
  - (지역경제 활성화) 태풍 피해지역 복구비 지원, 농어촌 지역 지원, 기타 지역 현안 대응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5조원 증액

JANUARY 01

재정
- 2024년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 2022년 세법개정후속 시행령 개정

경제
- 통계청 2022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발표

국제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FEBRUARY 02

재정
- 2022년 총세입·총세출 마감
- 2022년 결산보고서 제출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경제
- 한국은행 2022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 총생산 발표

MARCH 03

재정
-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기획재정부 → 각 중앙관서)

경제
- 한국은행 2022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발표

APRIL 04

재정
- 2022년 결산검사 의뢰 (기획재정부 → 감사원)

경제
- 2022년 연간 및 4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발표

국제
-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발표

MAY 05

재정
- 2024년 예산요구서 제출 (각 중앙관서 → 기획재정부)
- 2022년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정부 → 국회)
- 2022년 기금운용평가결과 발표
- 2022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발간

경제
- 통계청 2023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 발표
- 통계청 2023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JUNE 06

경제
- 한국은행 2023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발표
- 기획재정부 2023년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국제
-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 OECD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발표

JULY 07

재정
- 2023년 세제개편안 발표

경제
- 통계청 2023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 통계청 2022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발표
- 2022년 국민대차대조표 결과(잠정) 발표

AUGUST 08

재정
- 2024년 국유재산종합계획 제출
- 2023~2027 중기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확정

경제
- 통계청 2023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SEPTEMBER 09

재정
- 2024년 예산안 제출(정부 → 국회)
-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경제
- 한국은행 2023년 2/4분기 국민소득 (잠정) 발표

국제
-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OCTOBER 10

경제
- 한국은행 2022년 연간 기업경영분석 결과 발표

국제
- 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World Economic Outlook Report) 발표

NOVEMBER 11

경제
- 통계청 2023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국제
- OECD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발표

DECEMBER 12

재정
- 2024년 예산 확정

경제
- 기획재정부 2024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 한국은행 2023년 3/4분기 국민소득(잠정) 발표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01

한국재정정보원, 2022년 FIS 세미나 개최

한국재정정보원은 12월 13일(화),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한국재정정보원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재정원에서 주최한 '재정데이터 보고서 공모전' 시상식과 함께 재정데이터 분석의 다양한 사례와 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박용주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dBrain+,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를 위한 e나라도움 운영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이용해 증거기반 재정운용의 기틀을 닦겠다"고 말했다.





02

한국재정정보원, 2022년 연말 임직원 기부금 전달

한국재정정보원은 12월 21일(수) 열린 「2022 서울에너지복지 나눔대상」 전달식에 참석하여 임직원이 모은 기부금을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에 전달했다.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은 시민·단체·기업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조성된 기금이며 에너지 비용 감당이 어려워 한파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된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임직원의 참여와 나눔으로 1년간 모은 기부금 1천여만원은 노숙인 등 지역 취약계층의 혹한기 대비에 사용된다.





03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체험수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

한국재정정보원은 12월 26일(월) e나라도움 체험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보조금 수혜사례 및 e나라도움 사용 후기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보조사업자들에게 공유하고자 진행하였다. 박용주 원장은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e나라도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e나라도움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04

한국재정정보원, dBrain+ 및 e나라도움 품질경영시스템(ISO9001) 인증 획득

한국재정정보원은 11월 30일(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품질경영시스템(ISO9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재정원은 이번 인증 획득을 통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서비스의 SW 품질경영 신뢰도가 국제적 수준으로 정립됐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월간 〈나라재정〉

정기구독 신청안내

정기구독 신청방법

월간 〈나라재정〉은 구독 신청 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QR 코드로 접속해
신청해 주세요.



애독자 코너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월간 <나라재정>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독자 QUIZ

퀴즈 정답을 맞히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피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문제 기존 지출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지출을 줄이거나 재분배하는 예산관리제도는?

답 | | | | |

독자편지

월간 <나라재정>을 즐겁게 읽으셨다면 특별히 기억에 남는 페이지의 간단한 느낀 점을 적어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쿠폰을 보내드립니다.

sta******

'Fiscal Calendar'에 올해의 월별 재정과 경제 주제들을 펼쳐 놓은 걸 보니
지난 2022년의 재정과 경제가 한눈에 보이는 듯해서
고개를 끄덕이며 봤습니다. 2023년에도 재정과 경제 소식들을 담은
12권의 월간 <나라재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애독자 퀴즈 정답 & 독자편지 보내주실 곳

★ **응모 기간** 2023. 1. 15. ~ 2023. 1. 25.

QR 코드로 접속해
응모해 주세요.

지난 호 이벤트 당첨자

kis*****@naver.com
lim*******@naver.com
chw*******@naver.com
tia****@naver.com
010*******@naver.com
sta******@naver.com
mwp*******@naver.com
you***@naver.com
cul*****@naver.com
wis***@naver.com

한국소아암재단



매년 약 1,000여 명의 아이들이
소아암 진단을 받습니다.
한국소아암재단은 모든 소아암 환아가
새 생명을 얻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배우고
성장하여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환아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투병 중인 어린이들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백만 천사가 되어주세요.

괜찮아,
다 잘될 꺼야!
덕분에,
오늘 이식을 받아요.

(재)한국소아암재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인가받고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소아암, 백혈병, 희귀난치병
어린이 및 가족들을 돕는 비영리재단법인입니다.

후원 문의 : 02-3675-1145~6
이 메 일 : soaam9191@naver.com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0401-04-025956
(재)한국소아암재단

본 광고는 한국재정정보원 후원으로 진행되는 (재)한국소아암재단 무료 광고입니다.

FIS 한국재정정보원 |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Tel 02-6908-8200 **Fax** 02-6312-8959 www.fis.kr

ISSN 2508-8971